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주요 추진 과제 Pool 선정: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중심으로

김진영·정석호

2020. 1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주요 추진 과제 Pool 선정 :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중심으로

2020. 1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주요 추진 과제 Pool 선정: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중심으로

김진영·정석호

2020. 12.

■ 연구책임자: 김진영(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책연구팀)

■ 공동연구원: 정석호(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책연구팀)

목 차

제 I 장 연구의 개요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4
 제 II 장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추진현황	7
제1절 중앙정부	8
1.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추진 과정	8
2. 주요 정책 현황	11
제2절 지방정부	24
1. 조례구축 현황	24
2.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현황	35
 제 III 장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	39
제1절 자료 및 분석방법	39
제2절 분석결과	42
1. 주요 추진과제 Pool 선정	42

2. 주요 추진과제 선정	46
3. 추진과제별 중요도	48
4. 주요 추진과제별 시급도	50
5. 추진과제별 주체	52
6. 종합	55
 제Ⅳ장 결론 및 정책제언	 59
제1절 결과요약	59
제2절 정책제언	62
1. 합동평가 개요	62
2. 사회적경제 관련 지표	63
3. 지표예시(안)	64
제3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66
 참고문헌	 67
부록1: 전문가 델파이 조사 설문지(1~3차)	69
부록2: 지자체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구축 현황	93

표 목차

〈표 1〉 사회적경제 정책 전달체계	7
〈표 2〉 사회적경제기업 유형별 비교	9
〈표 3〉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②⑥ ‘사회적경제 활성화’ 주요내용	10
〈표 4〉 중앙부처 사회적경제 발전전략	20
〈표 5〉 부처별 주요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21
〈표 6〉 사회적경제기업 유형별 주요 지원제도	22
〈표 7〉 지자체 사회적경제 조례 조사개요	24
〈표 8〉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현황(유형별)	25
〈표 9〉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현황(전국)	26
〈표 10〉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현황(연도별)	28
〈표 11〉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현황(광역지자체별)	30
〈표 12〉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현황(교육청)	31
〈표 13〉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현황(기초지자체별)	33
〈표 14〉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구축현황(종합)	34
〈표 15〉 시도별 기초지원센터 설치현황	36
〈표 16〉 연도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현황	37
〈표 17〉 텔파이 조사 대상	40
〈표 18〉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주요 추진과제	45
〈표 19〉 추진과제별 전문가 동의 수준	47
〈표 20〉 추진과제별 중요도	49
〈표 21〉 추진과제별 시급도	51
〈표 22〉 추진과제별 추진주체 비율	53
〈표 23〉 주요 추진과제별 중요도 및 시급도	56
〈표 24〉 주요 추진과제별 중요도 및 시급도 상위 10개 과제	57
〈표 25〉 지표예시(안)	64

그림 목차

〈그림 1〉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방안	12
〈그림 2〉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현황(연도별)	27
〈그림 3〉 추진과제별 중요도 및 시급도	55

요약

- 중앙정부는 2017년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을 시작으로, ‘지역중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가 담당해야 할 주요 역할이 무엇인지, 어떻게 추진·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루어진 바 없음
- 이 연구에서는 최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추진해온 정책들을 살펴보고, 지역 중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각각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특히 지방정부에서 시급하게 추진·관리해야할 정책과제 제시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 기초·광역 지자체, 중간지원기관, 학계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14명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중요도 및 시급도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음
 - 중앙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 제도 개선과 사회적경제 기본 통계를 구축 등이 제시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관련 정책 홍보 및 공공부문 우선구매·수의계약 확대,
 - 지방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지방정부 내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지역자원 등 실태조사, 민관 협의체 운영 등이 선정되었음
- 정책제언에서는 지방정부의 우선 추진과제 중 대표적으로 민관협의체 운영을 사례로 관리방안을 제시하였음

제 I 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2000년 각 부처별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각 부처별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왔음
 -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근거법령 및 주관부처는 각각 사회적기업 육성법(2007, 고용노동부), 협동조합 기본법(2012, 기획재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자활기업, 2000, 보건복지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마을기업, 2011, 행정안전부) 등
- 특히 현 정부가 등장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중앙부처에서 22개의 사회적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하는 등 보다 본격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중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강조
 - 특히, '17년 발표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경제가 도입기('97년~'12년)를 지나 성장기('13~'22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하고, 이후 단계인 성숙기로 나아가기 위해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기조에서 민간 및 지자체 역할강화를 통한 지자체 중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중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인지, 지방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바 없으며, 지자체별 사회적경제 활성화 수준은 여전히 상당한 격차를 보임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부의 추진과제를 확인하고, 이 중 특히 지자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선정하는데 있음
- 지역이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새로운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가 담당해야 할 주요 역할이 무엇인지, 어떻게 추진·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루어진 바 없음
 - 일반적인 중앙-지방 사무 구분의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이 담당해야 할 역할과 중앙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 주체별로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 각 지자체 간에는 제도·환경·사회적경제기업 입지 등 사회적경제 현황 및 활성화 역량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최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추진해온 정책들을 살펴보고, 지역 중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각각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특히 지자체에서 시급하게 추진·관리해야 할 정책과제 Pool을 살펴봄으로써, 지역중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이 연구 2020년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책 및 제도적 현황을 연구의 범위로 한정함
 - 먼저, 시간적 범위는 2020년 현재를 기준으로, 2017년 부터 현재까지 추진된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및 제도를 대상으로 함
 -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 17개 광역시 및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모두 포괄함
 - 내용적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소위 4대 사회적경제조직 유형이라 불리우는 사회적경제기업을 포괄하며, 이와 관련해 중앙부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정책 및 지자체 조례를 중심으로 함

2. 연구의 방법

- 지방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선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함
 - 첫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는 무엇인지를 우선 선정할 필요가 있음
 -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정부 주도의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추진되었으나, 사회적경제 성장기에 이른 현재는

- 민간이 중심이 되고 정부는 민간을 뒷받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이 때, 정부가 주로 추진해야 할 과제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야 할 과제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과 의견이 존재하므로,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우선 선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들 중 중앙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와 지방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서로 구분해야 함
- 많은 정책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앙 및 지방정부가 각각 특히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는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전역을 정책의 대상으로 삼고 있거나 최저임금제도 등과 같이 전 국민에 대한 형평적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경우 중앙정부가 해당 정책을 주도하는 것이 필요하나,
- 지역별로 정책 추진 환경에 상당한 차이가 있거나, 주민의 정치적·정책적 선호의 직접적인 반영이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의 원리에 입각해 개별 지자체에서 해당 정책을 각각 결정·추진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지방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 중 중요한 과제와 시급한 과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책과제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서히 준비해야 할 과제와 당장의 문제해결을 위해 즉각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있을 수 있음
- 지방정부의 추진과제들 중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과제를 선별하여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 선정 필요
- 이상의 세 가지 절차는 각각 우리나라 사회적경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각자가 처한 상황 또는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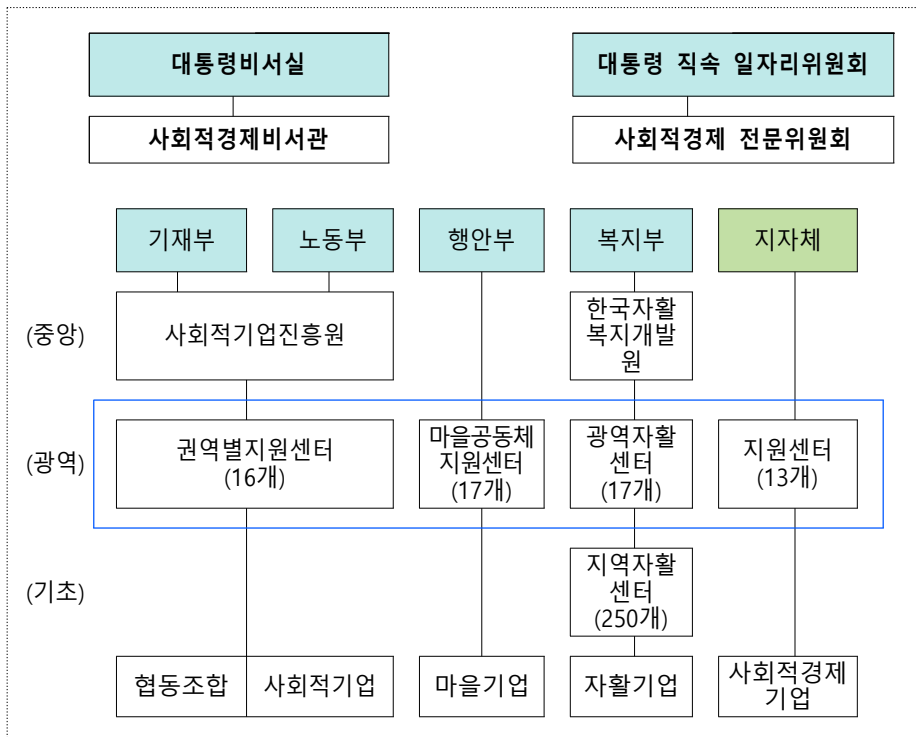
- 특히,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지방정부가 담당해야 할 역할, 지방정부 중에서도 광역지자체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기초지자체가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하여, 각 주체별로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 다양한 추진 과제 중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점 과제에 대한 의견도 사회적경제 주체별로 서로 평가가 다를 수 있음
- 서로 다른 의견과 생각이 대립할 가능성이 높은 이상의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를 활용하고자 함
- 델파이 조사방법은 미국의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에서 개발된 조사방법으로, 특히 이해집단의 갈등관계를 추정하거나 다수인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강점을 지니는 조사방법(강용주, 2008:2)

제II장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추진현황

- 이 장에서는 아래의 사회적경제 정책 전달체계를 토대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각 부처별 사회적경제 발전전략과 조례제정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표 1〉 사회적경제 정책 전달체계



*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0) 내부자료.

제1절 중앙정부

1.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추진 과정

-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정책은 이전 정부까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소관부처별로 추진되어 왔으나, 문재인 정부는 이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통칭하고 적극적인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과거 정부와의 문재인 정부와의 차이점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음
 - 이러한 점은 역대 정부별 국정과제에 대한 비교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는데,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시행된 후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2008~2013)는 국정과제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추진하였음
 -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후 출범한 박근혜 정부(2013~2017)는 국정과제로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추진하였음
 - 그리고 문재인 정부(2017~)는 국정과제를 통해 ‘사회적경제’를 공식화하는 한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통합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있음
- 2020년 12월 현재 국회에는 5개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계류 중에 있어, 사회적경제 정책은 아직 법적인 근거는 가지지 못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위원회 내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 사회적경제 관계부처 TF 등 통합적인 정책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임기 초부터 다양한 사회적경제 정책을 추진하였음

〈표 2〉 사회적경제기업 유형별 비교

구 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근거법령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마을기업육성지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작연도	2007년	2012년	2011년 (시범사업: 2010)	2012년 (자활공동체: 2000년)
유형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창의·혁신형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이종간협동조합 연합회	❶관리기준에 따른 유형: 예비마을기업, 신규 마을기업, 재지정 마을기업, 고도화 마을기업 ❷목적기준에 따른 유형: 청년마을기업, 재도약마을기업, 우수마을기업, 모두애 마을기업, 신유형마을기업(도시 재생형, 커뮤니티케어형, 지역특화형)	지역자활기업, 광역자활기업, 전국자활기업
전담 공공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한국자활복지개 발원
중간지원 기관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16개소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		권역별 마을기업지원센터 17개소	광역자활센터 15개소, 지역자활센터 245개소
기본계획 수립	5년/ 고용노동부	3년 / 기획재정부	-	-
실태조사	5년 / 고용노동부	2년 / 기획재정부	1년 / 행정안전부	-

*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0) 내부자료.

〈표 3〉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26 ‘사회적경제 활성화’ 주요내용

- **(법·제도 및 추진체계 구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법 제정 및 사회적경제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 정책 지원을 효율화
 - '17년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정부 대안 마련, 사회적경제 정책 조정·시행을 위한 전담조직* 구축 등 추진
 - * 예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구성, 5개년 사회적경제발전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사무처 설치 등
- **(생태계 구축)** 금융접근성 제고, 공공조달 활성화, 인재 양성 등 사회적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 마련
 - '18년부터 사회혁신기금, 사회투자펀드 조성, 신용보증 심사기준 및 한도 완화 등 사회적경제의 특성이 반영된 금융시스템 구축 추진
 - '17년부터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반영 등 사회적책임조달 체계 구축
 - '17년 인력 양성 로드맵 수립, 사회적경제 학습체계 구축 등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력 양성 체계 마련
 - '17년부터 유휴 국·공유 시설 등의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용을 촉진토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유경제 실현
-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17년부터 도시재생 분야 등의 진출을 지원하고, '18년부터 지역 일자리 사업 등과의 연계 강화 추진

2. 주요 정책 현황

□ (2017년 10월,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 정부는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부문에 대한 최초의 대책으로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 이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방향으로서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과 신속한 확산을 위해 인프라 확충 및 진출분야 확대 등 Two-Track 전략을 추진하였음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금융접근성 제고, 판로확대 지원, 인력 양성,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였으며,
- 소셜벤처, 주거환경, 사회서비스, 문화예술, 프랜차이즈, 지역기반 연계 분야 등 사회적경제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사회적경제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였음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필두로 하여 부처별 및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사회적경제 정책들이 발표되기 시작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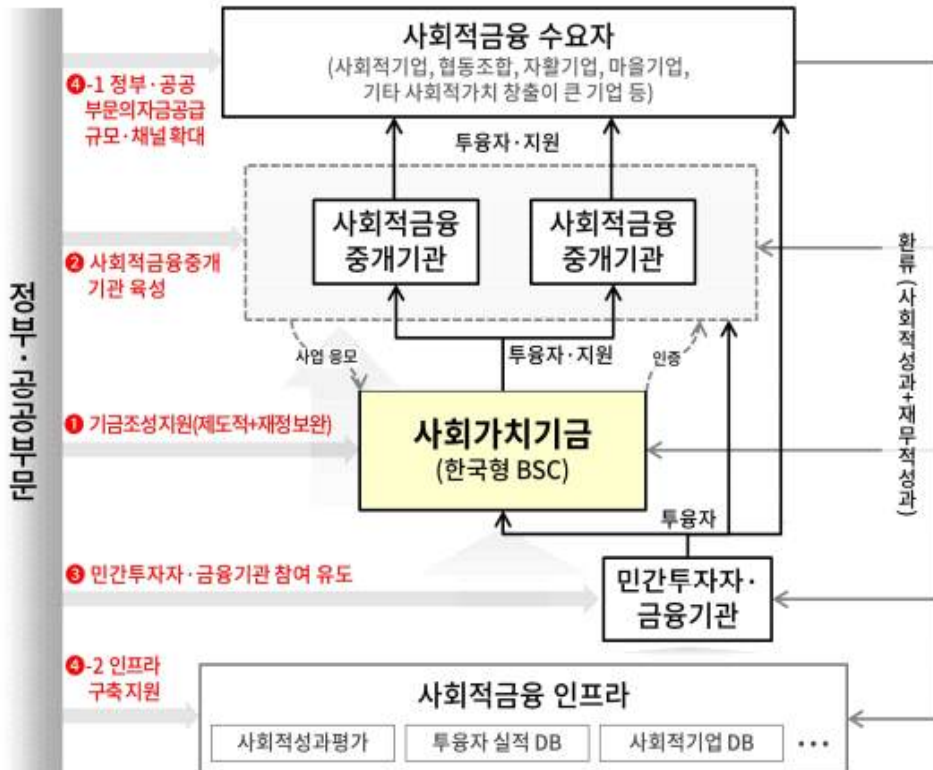
□ (2018년 2월,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이후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장 큰 애로 중 하나인 금융부문에 대하여 별도의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음
-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의 세부 추진방안으로 투자자와 사회적경제기업 간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해 금융과 사회문제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육성하고자 하였고,
- 다양한 민간투자자·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하였음

- 이로 인해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을 위한 촉매제로서 도매자금 공급기관인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2018년 12월 출범하였음

〈그림 1〉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방안



□ (2018년 5월, 관계부처 합동)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 정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소셜벤처에 주목하면서, 민간 차원의 활성화 노력을 사회경제 전반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해당 대책을 마련하였음
- 이를 통해 소셜벤처를 정책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셜벤처 판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 수도권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지방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업 공간, 기업 간 네트워킹, 공유형 물류창고, 경영 애로 해소 지원 등을 위한 소셜벤처 HUB 구축을 추진하였음
- 또한 소셜벤처 창업 활성화와 우수 소셜벤처 성장 촉진을 위해 1억원 까지 창업사업화 비용 지원, 소셜 임팩트투자 펀드 조성 등 소셜벤처 성장에 필요한 투자를 적극 활성화 하고자 하였음

□ (2018년 7월,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사회적경제 인재유입 확대와 종사자 역량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음
- 이는 혁신적인 청년의 사회적경제기업 유입 확대를 위한 취·창업 지원 강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신중년의 사회적경제 유입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의 교육접근성 제고,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맞춤형 교육훈련 강화 등 종사자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음
- 또한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내용을 반영하고, 지역주민 사회적경제 상시학습 지원, 사회적경제지원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 등 풀뿌리 사회적경제 토대 구축을 지원하였음

□ (2018년 7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인협동조합 2단계 혁신성장 전략

-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기반의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술융합 및 잠재인력 전문성 활용 등 과학기술 서비스 산업의 새로운 혁신 주체를 육성하기 위한 해당 전략을 마련하였음



- 2022년까지 과기협동조합 1,000개 육성과 조합 일자리를 1만개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 과기협동조합을 통해 연구산업, 과학문화산업 등 과학기술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전문화를 꾀하기 위해 대학·대기업 등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과기협동조합 육성 등 8대 추진과제를 수립하였음

□ (2018년 7월, 복지부)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 복지부는 그동안의 자활사업이 자활근로·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취업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 중심으로 운영되어온 점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 종전의 창업 전 단계 지원에서 탈피하여 창업과 시장에서의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해당 대책을 마련하였음
- 이를 위해 청년 자활근로 사업단 및 자활장려금 도입을 통한 청년 취·창업 지원 강화, 자활기업 문호 개방 및 규모화 지원, 자활사업 참여 절차 개편 및 참여자 역량 강화, 자활기업 지원 기반 개편, 자활기금 적극 지원 체계 마련 등 정책을 추진하였음

□ (2018년 9월, 교육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 계획

- 학교협동조합의 설립, 관리 및 감독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며, 학교협동조합과 연계한 학생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협동조합 (2018년 12월, 국토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관리협동조합 본격 육성
- 국토부는 2018년 3월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 공급되는 생활SOC 등을 운영·관리하고, 태양광서

비스, 마을상점, 아이돌봄 등 업무를 추진해주민 주도의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추진하였음

□ (2018년 11월, 고용부)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 3차 기본계획은 사회적기업의 외연을 넓히고 자생적 성장과 역할이 가능하도록 상호협력적 생태계를 만드는 정책에 중점을 뒀음
-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기업 진입을 돕고, 창업과 재도전 지원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음
- 또한 사회적기업이 더 높은 사회적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사회적기업-사회적경제기업 간 협업을 촉진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확장하고자 하였음

□ (2019년 3월,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계획

- 2018년 9월 발표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의 세부 실행계획으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던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을 활성화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을 지원하고자 마련하였음
- 지원계획은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자조모임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및 정착 유도, 분야별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및 진출 확대 등을 3개 분야를 주요내용으로 하여 추진되었음

□ (2019년 3월, 농식품부) 사회적 농업 확산을 위한 추진 전략

- 농식품부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추진 전략을 마련하였음
- 주요 정책방향으로 지원 대상 사회적 농장을 확대하는 한편, 체계적으

로 육성하기 위해 예비 사회적 농장과 거점농장을 도입하였음

- 또한 사회적 농장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생산품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농림사업은 연계하며, 사회적 농업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수단 및 교육을 활용하여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하였음

□ (2019년 9월,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서비스·일자리 창출 방안

- 정부는 일과 삶의 균형 중시 등 국민의 문화(여가) 수요 증대에 맞춰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을 특화 육성하여, 생활 밀착형 문화서비스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당 방안을 마련하였음
- 기존 문화 분야 맞춤형 지원체계 미흡,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사업모델 부족, 재원조달의 어려움 등 문제점을 바탕으로,
-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 도입 및 전담 중간지원조직 운영, 문화서비스로 창출되는 사회적 성과 측정체계 마련,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 등 정책을 추진하였음

□ (2019년 11월, 관계부처 합동)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 방안

-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와 지역현장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현장 중심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해당 방안을 마련하였음
- 이는 ‘사회적경제 지역 기반 및 정책역량 제고’를 목표로 추진되었으며, 국정과제이자 정부 핵심 정책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민간 주도, 지역 기반으로 본격 추진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였음
- 이를 위해 지역의 추진기반 공고화, 현장 활동 지원,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환경 조성 등 3개 분야 60개 과제를 마련하였으며

- 조례 등 자치단체 추진체계 정비, 민·관 협치기구 제도화, 중간지원기관 운영 개선, 정부·자치단체 사업 참여와 유휴 국·공유시설 활용 확대, 자치단체가 인재양성, 금융접근성 제고, 판로 확대 방안을 마련·시행하는 등 지역·현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였음

□ (2019년 12월,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경제 연계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

- 농림부,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농·산·어촌의 사회적경제 활동 사례와 각자 추진하던 지역 활성화 정책을 종합하고 연계하기 위해 해당 방안을 마련하였음
- 농·산·어촌에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 농·산·어촌에 사회적경제 환경 조성, 지역 활성화 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 등 농·산·어촌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농·산·어촌 활력을 증진하고자 하였음

□ (2020년 1월,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 전략

- 정부는 민간의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을 촉진·장려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음
- 이를 통해 부처 소관 중간지원기관 통합·연계 등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체계 개선, 조합형 사회적금융기관 역할 강화 등 사회적 금융 기반 고도화,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확충 등 과제를 추진하였음

□ (2020년 3월, 기재부)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 3차 기본계획은 협동조합이 스타트업 단계에서 스케일업 단계로 안정



적으로 전환·정책할 수 있도록 성장기반을 확립함과 동시에, 협동조합 간 연대 및 지역에 기반한 성장을 통해 협동조합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Advance), 협동조합 간 연대 강화(Band), 지역 사회 중심 운영(Community), 차별해소를 위한 제도개선(Deregulation), 교육 및 홍보 내실화(Education)를 5대 전략으로 하고 있음

□ (2020년 7월, 관계부처 합동)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정부는 신산업, 환경문제 해결, 환경 서비스 등 변화된 시장에서의 사회적경제기업 진출을 확대하고 전 단계별 육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 세부계획으로 업사이클 지역 거점 육성, 경영컨설팅·신제품 개발 등 전 과정을 지원하여 업사이클 기업의 창업 및 성장에 집중하며,
- 온라인 등으로 확대되는 녹색제품 시장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증취득·판로지원 등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 특히 마을주민이 주도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을 결성하여 마을단위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기술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우리그린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2020년 8월,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스케일업)을 통한 자생력·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여 혁신성장 기반 강화, 지역의 자생·상생기반 확충, 진출분야 다양화 지원을 정책과제로 해당 방안을 마련하였음

- 민간판로 개척지원 및 공공판로 확대, 성장금융 확대와 사회적금융 인프라 강화, 지역별 사회적경제 허브 조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개발 활성화, 환경·신재생에너지·사회서비스·소셜벤처·문화·교육·과학 등 진출분야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음
- (2020년 10월,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 증기부 옴부즈만 주관 하에 사회적경제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에 대한 규제애로 일괄정비를 추진하였음
 - 기업 간 형평성 및 자생력 제고, 정부조달 진입촉진 및 부담경감, 규제 현실화 및 행정부담 감축, 성장촉진 기반조성 및 지원강화 등 4대 분야의 개선방안을 추진하였으며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인정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사회적경제기업 신용평가시 매출실적 부담완화, 사회적기업 제품 의무구매비율 법제화 추진, 마을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근거마련 등 과제가 포함됨

〈표 4〉 중앙부처 사회적경제 발전전략

연도	정책명	발표일	발표주체
2017	①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10. 18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② 사회통합적 평창동계올림픽 유산(Legacy) 창출 방안	12. 22	관계부처 합동 문체부
2018	③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2. 8	관계부처 합동
	④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5. 16	관계부처 합동
	⑤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7. 3	관계부처 합동
	⑥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2단계 혁신성장전략 ('18~'22)	7.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⑦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7. 26	보건복지부
	⑧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관리 협동조합 사업 추진방안	7. 26	국토교통부
	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	9. 6	교육부
	⑩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저성장 시대의 따뜻한 성장동력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기본계획 ('18~'22)	11. 9	관계부처 합동
2019	⑪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	2. 19	국토교통부
	⑫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계획	3. 21	관계부처 합동
	⑬ 사회적 농업 확산을 위한 추진 전략	3. 25	농림축산식품부
	⑭ 복권기금의 사회적 가치 제고 방안	4. 26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⑮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서비스·일자리 창출방안	9. 3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⑯ 지역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방안	11. 5	관계부처 합동
	⑰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	12. 5	관계부처 합동
2020	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	15	관계부처 합동
	⑲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3. 31	기획재정부
	㉔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7. 22	관계부처 합동
	㉕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8. 13	관계부처 합동
	㉖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10. 15	관계부처 합동

〈표 5〉 부처별 주요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부처	지원사업 내용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 사업개발비 지원 /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조성 /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통합플랫폼 /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 모태펀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 소셜벤처 육성 / 소셜임팩트 펀드 / 사회적경제기업 정책자금 지원 /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 토요일문화학교 운영 / 작은영화관 건립 /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 스포츠클럽 육성 / 관광두레 조성
산업통상자원부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R&D) /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비R&D)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 디자인 주도 사회적기업 혁신역량 강화 / 사회적경제기업 해외진출 지원
보건복지부	자활기업 활성화 지원 /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 사회적경제 연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교육부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 인문사회연구소(문제해결형) 지원 / 대학 창업 교육체제 구축 /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사업화 지원 / 도시재생지역 공동체 활성화(마을관리협동조합) / 사회주택
농림축산식품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 농촌 교육·문화·복지(축제·유학 포함) 지원
산림청	산림형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 산림일자리발전소 운영 / 신제품 생명자원 활용 공동체 활성화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 보증사업 /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구축
기획재정부 등	협동조합 활성화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지원 /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 / 어촌뉴딜 300
지자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전담 조직 설립 /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국·공유재산 사용료 인하 /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등 재정·세제 혜택 강화 공급 활성화

* 출처: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사업 안내 (2019,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표 6> 사회적경제기업 유형별 주요 지원제도

구 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세 제 지 원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
	소득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
	취득세	50% 감면	-	-
	등록세	50% 감면	-	-
	부가가치세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4년, 최대 50인)	-	탈수급자에 대한 4대보험 기업 부담금 전액 지원 (최대 2년, 자활기금 사용)
	재산세	25% 감면	-	-
재 정 지 원	개인 지방소득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
	일반 인력	신규인력 인건비 지원(최저임금 기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포함 / 예비 2년, 인증 3년, 최대 50인)	-	-
	전문 인력	전문인력 고용인건비 지원(200~250만원 한도, 일부 자부담 / 예비 2년(1명), 인증 3년(2명))	-	-
	사업 개발비	기술개발, R&D, 마케팅 등 경영역량 향상을 위한 사업비 (연간 1억원(인증)(3년), 5천만원(예비)(2년))	인건비, 재료비, 임차료 등 사업운영비(지정마 을기업 최대 1억원, 예비마을기업 최대 1천만원, 최대 3년)	· 수급자: 최대 5년(2년까지 100%, 2년 초과시 50%) · 비수급자: 인정 후 초기 6개월, 3개월 100%, 이후 50% · 최대 5년(1년 단위 재신청), 월 최대 250만원 · 사업비지원(전문 가 사용 및 홍보비, 최대 3명) · 자활기업창업자금 (자활사업단 매출액의 60%) · 사업자금 융자(최대 1억원) · 기계설비비(최대 5천만원)
	시설비	사회적기업 설립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 융자지원	유휴공간 매입비용 금융지원(건당 최대 5억원, 융자금리 3.5% 내외)	-
기 타	공공구매	·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대상	-

구 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지 원	대상 우선구매 권고 · 권역별 공공구매 지원기관 운영 및 상담 지원	우선구매 권고		우선구매 권고
	컨설팅 · 경영컨설팅(표준형:3~10백만원, 자율형: 제한 X) · 프로보노(재능기부뱅크)	-	· 유통·마케팅 역량지원 프로그램(한국MD협회 협업) · 신규마을기업 대상 역량교육(행안부 주관) · 상시 경영컨설팅	컨설팅 자부담금 지원
	시스템 통합정보시스템	협동조합 관리시스템 협동조합 홍보포탈 시스템	-	자활정보시스템
	창업지원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창업공간, 자금, 사업비 및 인큐베이팅 지원) · 지역기반 정책연계 창업지원사업(공간, 자금, 교육, 정책연계 지원)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선배협동조합과의 팀코칭 기반 팀빌딩, 사업화, 멘토링 및 팀당 최대 6,500천원 지원)	마을기업 설립희망자 교육	창업자금 지원(자활근로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전환 시 전환 인원에 따라 1/2 이상 100% 이내, 1/2 미만 70% 이내, 1/3 미만 50% 이내)
	판로지원 ·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e-store 36.5+), 오프라인 판매장(스토어 36.5) 입점 지원 · 사회적경제 박람회, 판촉전 개최	· 상품 개선 및 공동브랜드 상품 개발 지원 · 온오프라인 상품 입점을 위한 비용지원 · 유통채널 MD 파견 지원	· 유통지원센터 구축 · 역량 지원 프로그램 · 스타상품 발굴 · 박람회 및 직거래 장터	우수자활기업의 공공기관 쇼핑몰 입점 지원
	기금	-	-	자활기금
	공간지원 · 창업지원 공간(성장지원센터) 제공((예비)사회적기업 대상) · 국·공유지 임대 지원	창업지원 공간(성장지원센터) 제공(창업팀 및 사회적협동조합 대상)	지역혁신 거점공간 제공	· 국공유지 우선임대 · 전세점포 임대(기업 당 2억원까지, 최장 10년, 연 3.0% 이내)

*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0) 내부자료.

제2절 지방정부

1. 조례구축 현황

- ‘20년 9월 말 기준,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는 총 605개로,
- 조례 제정 주체별로는 기초자치단체가 482개로 가장 많고, 광역자치단체 99개, 교육청 25개 순이며,
- 유형별로는 사회적경제 기본조례가 178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활기금(150개), 사회적기업 지원조례(100개) 등의 순

〈표 7〉 지자체 사회적경제 조례 조사개요

- 시행규칙(132개)은 본 조례와 동일로 간주하였으며, 전체 조례 수 산정에서 제외
- ‘20년 기준 조례 제정 권한을 보유한 17개 특별·광역시·자치·교육청 및 226개 기초지자체 전수조사 결과이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시스템 활용, 현행 자치법규 대상 관련 키워드 검색을 통해 조사(조례명 기준)
 - (키워드①) 기본조례(사회적경제, 사회적가치)
 - (키워드②) 사회적경제 조직 유형(사회적경제기본법안(윤호중의원 발의안, ‘20.7.14.) 내 14개 유형)
 - (유형분류) 기본조례(사회적경제, 사회적가치), 지원형태(기금, 공공구매/조달/판로), 조직유형(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으로 구분

〈표 8〉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현황(유형별)

구분		조례 제정 주체			합계
		광역시	교육청	기초	
총합계		98	25	482	605
기본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17	4	157	178
	사회적가치 기본조례	3	0	2	5
지원 형태	사회적경제기금	6	0	2	8
	자활기금	6	0	144	150
	공공구매/조달/판로	16	11	31	58
조직유 형	사회적기업	9	2	89	100
	협동조합	9	8	32	49
	마을기업	1	0	1	2
	자활사업	14	0	12	26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	0	0	1
	농업회사법인	1	0	7	8
	소셜벤처	0	0	1	1
	중소기업협동조합	15	0	4	19

□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중 조례 내용이 가장 구체화되어 있는 사례 중 하나는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로, 제1장에서 총칙을, 제2장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를, 제3장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항을, 제4장에서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협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일반적인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들이 최소 8조에서 평균 18조 내외로 구성된 반면,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는 총 46조로 구성, 조례 내에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 및 지원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

□ 지역별로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조례 총합은 서울이 75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경기(74개), 부산(50개), 경북(48개), 전북(46개) 등의 순

〈표 9〉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현황(전국)

구분	기본조례		지원형태			조직유형								합계
	사회적경제	사회적가치	사회적경제기금	자활기금	공공구매/조달/판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사업	소비자생협	농업법인	소셜벤처	중소기업협조	
총합계	178	5	8	150	58	100	49	2	26	1	8	1	19	605
서울특별시	25	0	2	18	10	12	4	0	1	0	0	1	2	75
부산광역시	8	0	0	13	5	15	7	0	1	0	0	0	1	50
대구광역시	6	0	0	7	1	8	3	0	1	0	0	0	1	27
인천광역시	10	0	0	2	3	2	1	0	1	0	0	0	1	20
광주광역시	7	2	0	1	3	1	2	0	3	0	0	0	0	19
대전광역시	6	1	0	2	1	1	1	0	5	0	0	0	1	18
울산광역시	6	0	0	1	1	2	2	0	1	0	0	0	1	14
세종특별자치시	2	0	1	1	2	0	1	0	0	0	1	0	0	8
경기도	28	2	2	17	8	5	6	0	5	0	0	0	1	74
강원도	15	0	0	13	3	5	2	0	1	0	0	0	1	40
충청북도	3	0	0	8	2	11	4	0	0	0	1	0	1	30
충청남도	8	0	1	11	7	7	1	0	2	0	0	0	1	38
전라북도	7	0	1	10	2	13	7	0	1	0	3	0	2	46
전라남도	23	0	0	12	2	0	0	0	1	0	3	0	2	43
경상북도	16	0	0	19	2	8	1	0	1	0	0	0	1	48
경상남도	7	0	1	14	4	9	5	1	1	0	0	0	2	44
제주특별자치도	1	0	0	1	2	1	2	1	1	1	0	0	1	11

- 연도별로는 1995년 이후 2007년 까지 자활기금 관련 조례만 존재, 본격적인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제정은 2009년 이후
-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2009년부터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제정 및 확산 시작, 최초 사회적기업 지원조례 제정 후, 사회적경제기본조례로 조례명 변경사례 多
 -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2013년부터 협동조합 관련 조례 제정 및 확산 시작
 - 2017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2018년부터 제정된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는 총 148건으로, 자활기금 조례를 제외¹⁾한 전체 455개 조례 중 약 32.5%를 차지

〈그림 2〉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현황(연도별)



- 1) 자활기금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를 근거로 제정, 최근 조례가 자활기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과 달리 초창기 조례는 자활기금의 적립 및 사용 관련 내용만을 담고 있어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음

〈표 10〉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현황(연도별)

구분	기본조례		자원형태			조직유형								합계
	사회적경제	사회적가치	사회적경제기금	자활기금	공공구매/조달/판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사업	소비자생협	농업법인	소셜벤처	중소기업협조	
총합계	178	5	8	150	58	100	49	2	26	1	8	1	19	605
1995	0	0	0	1	0	0	0	0	0	0	0	0	0	1
1997	0	0	0	1	0	0	0	0	0	0	0	0	0	1
2000	0	0	0	4	0	0	0	0	0	0	0	0	0	4
2001	0	0	0	13	0	0	0	0	1	0	0	0	0	14
2002	0	0	0	2	0	0	0	0	0	0	0	0	0	2
2003	0	0	0	8	0	0	0	0	0	0	0	0	0	8
2004	0	0	0	11	0	0	0	0	0	0	0	0	0	11
2005	0	0	0	12	0	0	0	0	0	0	0	0	0	12
2006	0	0	0	17	0	0	0	0	0	0	0	0	0	17
2007	0	0	0	15	0	0	0	0	0	0	0	0	0	15
2008	0	0	0	15	0	1	0	0	0	1	0	0	0	17
2009	9	0	0	6	0	13	0	0	4	0	1	0	0	33
2010	16	0	0	4	0	40	0	0	2	0	2	0	0	64
2011	4	0	0	5	0	34	0	0	1	0	0	0	0	44
2012	2	0	1	4	1	6	0	0	2	0	1	0	0	17
2013	4	0	0	2	4	2	25	0	1	0	0	0	0	38
2014	17	0	1	2	6	2	11	0	1	0	0	0	0	40
2015	25	0	1	1	6	1	3	0	4	0	3	0	0	44
2016	13	1	1	9	7	0	0	1	0	0	1	0	0	33
2017	20	1	0	5	8	0	5	0	2	0	0	1	0	42
2018	29	0	1	3	4	0	1	0	3	0	0	0	0	41
2019	26	1	1	5	18	1	4	0	4	0	0	0	12	72
2020	13	2	2	5	4	0	0	1	1	0	0	0	7	35

- 광역지자체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지자체에서 제정한 조례는 제주가 9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서울과 전북(8개), 부산, 대구(7개) 등의 순
- 유형별로는 사회적경제 기본조례가 17개로 가장 많고, 공공구매/조달/판로 관련 조례(16개), 중소기업협동조합(15개), 자활기업(14개) 등의 순
 - 모든 광역지자체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를 제정한 반면, 사회적가치 관련 기본 조례는 광주, 대전, 경기 등 일부 지역에 국한
 - 서울과 인천은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관련 조례’를 병용
 -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는 2019년 이후 제정되기 시작하여, 현재 15개 광역지자체로 확산되는 등 최근 급격히 증가 추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구축 현황]

-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시행규칙
-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등에 관한 조례
- ▷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 ▷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시행규칙
- ▷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표 11〉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현황(광역시자치체별)

구분	기본조례		지원형태			조직유형								합계
	사회적경제	사회적가치	사회적경제기금	자활기금	공공구매/조달/판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사업	소비자생협	농업법인	소설치	중소기업협동조합	
총합계	17	3	6	6	16	9	9	1	14	1	1	0	15	99
서울특별시	1	0	1	0	2	1	1	0	1	0	0	0	1	8
부산광역시	1	0	0	1	1	1	1	0	1	0	0	0	1	7
대구광역시	1	0	0	0	1	1	1	0	1	0	0	0	1	6
인천광역시	1	0	0	0	2	0	0	0	1	0	0	0	1	5
광주광역시	1	1	0	0	1	1	1	0	1	0	0	0	0	6
대전광역시	1	1	0	0	0	1	1	0	1	0	0	0	1	6
울산광역시	1	0	0	0	1	1	1	0	1	0	0	0	1	6
세종특별자치시	1	0	1	1	1	0	0	0	0	0	1	0	0	5
경기도	1	1	1	0	1	0	0	0	1	0	0	0	1	6
강원도	1	0	0	1	0	0	0	0	1	0	0	0	1	4
충청북도	1	0	0	1	1	1	1	0	0	0	0	0	1	6
충청남도	1	0	1	0	1	0	0	0	1	0	0	0	1	5
전라북도	1	0	1	1	1	1	1	0	1	0	0	0	1	8
전라남도	1	0	0	0	1	0	0	0	1	0	0	0	1	4
경상북도	1	0	0	0	0	0	0	0	1	0	0	0	1	3
경상남도	1	0	1	0	1	0	0	0	0	0	0	0	1	4
제주특별자치도	1	0	0	1	1	1	1	1	1	1	0	0	1	9

-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는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11건, 협동조합 관련 조례(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8건, 공공구매/조달/판로 관련 조례 4건 등으로,
- 전국 17개 교육청 중 대구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1개 이상의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를 제정

〈표 12〉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현황(교육청)

구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공공구매/ 조달/판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합계
총합계	11	4	2	8	25
서울특별시	1	0	0	1	2
부산광역시	0	1	0	1	2
대구광역시	0	0	0	0	0
인천광역시	0	0	1	1	2
광주광역시	0	1	0	1	2
대전광역시	1	0	0	0	1
울산광역시	0	1	0	0	1
세종특별자치시	1	1	0	1	3
경기도	1	0	0	0	1
강원도	1	0	0	0	1
충청북도	1	0	0	0	1
충청남도	1	0	0	1	2
전라북도	0	0	1	1	2
전라남도	1	0	0	0	1
경상북도	1	0	0	0	1
경상남도	1	0	0	0	1
제주특별자치도	1	0	0	1	2



- 기초지자체별로는 지원 대상·수준·방법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
 - 기초지자체에서 제정한 조례는 순창군과 창원시가 5개로 가장 많음
 - 광역단위 내 기초지자체 평균 조례제정 건수는 2.13건이며, 대구, 서울, 전북, 부산 등은 평균 2.5건 이상으로 많은 편
 - 반면, 인천 및 울산은 평균 1.5건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평균 조례제정 건수가 적은 편
- 각 기초자치단체들은 부문별·지원방법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조례 운영 중
 - 226개 지자체 중 사회적가치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파주시가 유일
 - 서울시 성동구 및 화성시는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경남 합천군은 마을기업 지원조례를, 성동구는 소셜벤처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자체별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상당한 차이

〈표 13〉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현황(기초지자체별)

구분	기본조례		지원형태			조직유형								합계 (평균)
	사회적경제	사회적가치	사회적경제기금	자활기금	공공구매/조달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사업	소비자생협	농업법인	소셜벤처	소기업협동조합	
총합계 (226개 지자체)	157	2	2	144	31	89	32	1	12	0	7	1	4	482 (2.13)
서울특별시 (25개 지자체)	24	0	1	18	7	11	2	0	0	0	0	1	1	65 (2.60)
부산광역시 (16개 지자체)	6	0	0	12	4	14	5	0	0	0	0	0	0	41 (2.56)
대구광역시 (8개 지자체)	5	0	0	7	0	7	2	0	0	0	0	0	0	21 (2.63)
인천광역시 (10개 지자체)	9	0	0	2	1	1	0	0	0	0	0	0	0	13 (1.30)
광주광역시 (5개 지자체)	5	1	0	1	2	0	0	0	2	0	0	0	0	11 (2.20)
대전광역시 (5개 지자체)	5	0	0	2	0	0	0	0	4	0	0	0	0	11 (2.20)
울산광역시 (5개 지자체)	4	0	0	1	0	1	1	0	0	0	0	0	0	7 (1.40)
세종특별자치시 (0개 지자체)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00)
경기도 (31개 지자체)	27	1	1	17	6	5	6	0	4	0	0	0	0	67 (2.16)
강원도 (18개 지자체)	14	0	0	12	2	5	2	0	0	0	0	0	0	35 (1.94)
충청북도 (11개 지자체)	2	0	0	7	0	10	3	0	0	0	1	0	0	23 (2.09)
충청남도 (15개 지자체)	7	0	0	11	5	7	0	0	1	0	0	0	0	31 (2.07)
전라북도 (14개 지자체)	6	0	0	9	1	11	5	0	0	0	3	0	1	36 (2.57)
전라남도 (22개 지자체)	22	0	0	12	0	0	0	0	0	0	3	0	1	38 (1.73)
경상북도 (23개 지자체)	15	0	0	19	1	8	1	0	0	0	0	0	0	44 (1.91)
경상남도 (18개 지자체)	6	0	0	14	2	9	5	1	1	0	0	0	1	39 (2.17)
제주특별자치도 (0개 지자체)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00)

〈표 14〉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구축현황(종합)

전국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기초자치단체

2.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현황

-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00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0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대부분이나, 마을공동체지원센터(경기도 군포시), 파북공동체지원센터(경기도) 등 명칭을 주로 사용,
 - 개별 광역·기초지자체 단위 조례를 근거로 설립·운영 중
 - 00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00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00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등
 - 구청장 또는 구청장 또는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별도의 독립 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
- 시도별로는 '19년 기준 전국 76개소 (광역 12개소*, 기초 64개소) 운영 중
 - 지역별 분포현황은 전국 중 68%(76개소 중 52개소)가 서울(24개소), 인천(22개소), 경기(6개소)에 위치하는 등 주로 수도권에 편중되어있으며,
 - 시도별 기초지원센터 설치는 서울특별시 92%(23개소/25자치구), 광주광역시 80%(4개소/5자치구), 경기도 68%(21개소/31자치구) 순
- 센터별 예산은 광역센터는 개소당 평균 1,885백만원(22,617백만원/12개소), 최대 8,945백만원(경기도파북공동체지원센터), 최소 150백만원(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 기초센터는 개소당 평균 273백만원(16,932백만원/64개소), 최대 1,600백만원, 최소 21백만원

〈표 15〉 시도별 기초지원센터 설치현황

광역지자체	센터수	자치구수	광역지자체	센터수	자치구수
서울	23	25	광주	4	5
인천	5	11	경북	0	23
경기	21	31	경남	3	18
강원	2	18	대구	0	8
대전	1	5	부산	0	16
충북	0	11	울산	1	5
충남	0	15	제주	0	2
전북	4	14	세종	0	1
전남	0	22	총계	64	229

- 운영형태별로는 위탁센터는 개소당 평균 661백만원(33,096백만원/50개소), 최대 8,945백만원(경기도파북공동체지원센터), 최소 34백만원(강릉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직영센터는 개소당 평균 248백만원(6,456백만원/26개소), 최대 1,600백만원, 최소 21백만원
- 운영인력은 광역센터는 개소당 평균 17.2명(207명/12개소), 기초센터는 평균 4.8명이(309명/64개소) 근무
 - 이 중 위탁센터는 개소당 평균 8.5명(425명/50개소), 직영센터는 평균 3.5명이(91명/26개소) 근무
 - 위탁센터의 근무인원은 직영센터의 2.4배이므로, 사회적경제 지원업무 확장에 따라 위탁형태를 택하는 것으로 추정
- 운영형태로 보면, 전국 76개소 중 50개소가 위탁(66%), 26개소(34%)가 직영

- 광역지자체는 위탁 12개소로 직영은 없으며, 기초지자체는 위탁 38개소(59%), 직영 26개소(41%)
 - 광역지자체의 경우, 사회적경제 활성화 업무 규모가 크며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기에 100% 위탁운영 형태를 보이는 반면,
 - 기초지자체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업무 초기에는 직영 형태를 취하다가, 업무 확대에 따라 위탁운영으로 전환하는 추세
 - (직영 기초센터) 평균예산 248백만원, 평균인력 4명
 - (위탁 기초센터) 평균예산 276백만원, 평균인력 6명
 - 평균 위탁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성과가 우수하다고 거론되는 서울, 경기도, 대구 등은 통상 3년 단위 위탁계약을 체결 → 장기위탁계약이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
-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설립된 시기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전('10~'16)에 설립한 센터는 48개소(63.2%), 출범이후('17~)에 설립한 센터는 28개소(36.8%)
- 문재인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방향이 광역·기초지자체의 지원센터 설립을 가속화하는 효과 창출

〈표 16〉 연도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현황

연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합계
개소	3	7	7	4	5	13	9	18	7	3	76
비율 (%)	3.9	9.2	9.2	5.2	6.5	17.1	11.8	23.6	9.2	3.9	100



□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주요사업

- 광역지자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및 정책기획, 연구조사 등 광범위한 사업을 수행

※ 광역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주요사업

- 판로지원 및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 광역단위의 사회적경제조직 간 네트워크 구축
- 민·민/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강화 사업
- 사회적경제 정책기획 및 연구조사 등

- 광역지자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주로 사회적경제조직 모델 발굴부터 사업화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세부적인 사업을 수행

- 특히 지역특화 사업 및 지역 의제별 전략을 수립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기초센터도 존재(사례: 서울 강북구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광주 광산구 공동육아 사업 등)

※ 기초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주요사업

- 사회적경제조직 모델 발굴 및 인큐베이팅
- 사회적경제기업의 규모화 및 시장 개발
- 사회적경제 종사자의 역량강화교육
- 지역 의제 간담회 및 네트워크 운영 등

제III장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

제1절 자료 및 분석방법

-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주요 추진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그 방법으로 사용함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 정부의 역할 및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 주체의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과 생각이 대립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
 - 이해관계 집단의 갈등관계를 추정하거나 다수인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효과적인 델파이 방법을 활용함
- 델파이조사를 위한 전문가 집단은 광역지자체 사회적경제 담당 공무원 2명, 기초지자체 사회적경제 담당 공무원 2명, 지자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의체 대표 1명, 사회적경제 및 지자체 평가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학계 전문가 8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하였음
 -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경우, 각 지방정부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의 부서장급에 해당하는 팀장 및 과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이 때 기초지자체 공무원 중 1인은 자치구 공무원, 2인은 일반시 공무

원으로 선정

- 중간지원기관의 경우, 2020년 현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통합지원 기관을 운영하면서 중간지원기관 협의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전문가를 참여 대상으로 선정
- 학계의 경우, 경제학, 경영학, 사회복지학, 행정학 등 사회적경제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현재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를 지속하고 있거나 정부 정책 분석·평가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전문가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

〈표 17〉 델파이 조사 대상

구분	소속기관	직위(전공)
광역지자체	A광역시	사회적경제육성팀장
	B광역시	사회적경제과장
기초지자체	A자치구	사회적경제팀장
	B시	사회연대지원과장
	C시	사회적경제과장
중간지원기관	A협회	공동대표
학계	A대학	교수(경제학 박사)
	B대학	교수(경영학 박사)
	C대학	교수(사회복지학 박사)
	D대학	교수(행정학 박사)
	E대학	교수(행정학 박사)
	F대학	교수(행정학 박사)
	A연구원	부연구위원(경제학 박사)
	B연구원	연구위원(경제학 박사)

□ 조사는 총 3회 진행되었음

- 1차 조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추진과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광역-기초 정부가 각각 담당해야 할 주요 역할과 필요성,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장·단기적 노력(추진과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10.22.(목)~11.3.(화))
-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를 통해 취합된 추진과제 Pool에 대한 동의 수준과 해당 과제를 추진해야 할 핵심 주체는 누구인지, 그리고 각 추진과제가 갖는 중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평가를 조사(11.24.(화)~12.1.(화))
- 3차 조사에서는 2차 조사 응답결과에 본인을 포함한 전체 전문가가 응답한 결과를 평균, 표준편차, 중간값 등의 형태로 요약하여 제시하고, 기존 조사 응답결과에 대한 수정의사 여부를 묻고 수정의사 여부를 조사(12.2.(수)~12.7.(월))

제2절 분석결과

1. 주요 추진과제 Pool 선정

- 1차 조사에서 전문가들이 응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추진과제는 크게 정책 및 정책전달체계와 사회적경제 인프라로 구분할 수 있음
- 먼저, 정책 및 전달체계 측면에서 정부가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로는 정책총괄, 거버넌스 구축, 공공부문 역할확대 및 전달체계 지원 등임
 - 정책 총괄 측에서 정부는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정책 추진현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관련 정책의 홍보,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등과 같은 주요 제도의 개선을 담당할 필요가 있으며,
 - 이 때 주요 추진 주체로는 주로 중앙정부가 지목되었으며, 예외적으로 중장기발전계획의 경우 중앙과 광역, 그리고 기초정부가 모두 각각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야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음
 - 다음으로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하여 정부는 중앙정부 내 관계부처와의 협의체, 중앙-광역-기초 간의 다수준 간 협의체, 민간부문과의 협의체, 지방정부 내 각 부서 간 협의체 등을 구성할 필요가 지적되었으며, 동시에 민간부문에서 당사자조직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음
 - 이 때, 민간부문과 정부와의 협의체 및 당사자조직 간 네트워크 구축·지원은 기초정부가, 관계부처와의 협의체 운영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내 협력체계는 광역 및 기초정부가 주로 추진해야 할 주체

로 지목되었음

-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 측면에서는 공공부무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확대, 사회적경제 전담부서 설치 및 직제조정을 통한 총괄기능 부여, 사회적경제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직위제·임기제 공무원 운영 및 전담인력 교육 강화, 담당공무원 평가체계 개선을 통한 업무자율성 제고 등이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되었으며,
 - 이 때, 주요 추진주체로는 주로 광역정부와 기초정부가 역할을 담당하며, 공공부문의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확대는 중앙, 광역, 기초정부 모두가 함께 추진해야할 과제로 선정되었음
 - 마지막으로 전달체계 측면에서는 현재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중간지원기관을 통합운영하는 방안과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각각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중간지원조직들을 하나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과 중간지원기관 간 협력사업 발굴 및 치우개선을 통한 사업운영의 내실화가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되었으며,
 - 이를 위한 주요 추진 주체로는 부처별 중간지원기관 통합은 중앙정부가, 광역단위 중간지원기관 통합은 광역정부가,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발굴 및 치우개선은 광역 및 기초정부가 담당해야 할 주체로 지목됨
- 다음으로 사회적경제 인프라와 관련하여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인력양성, 지식·정보의 확산, 사회적금융 활성화, 주민참여 활성화 등이 제시되었음
- 먼저,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초중고 대상 사회적경제 관련 직장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에서 보다 전문적인 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특성화대학을 선정하는 것, 인재양성센터 설립 등을 통해 보다 체

계적으로 인재양성을 추진하는 것, 사회적가치 평가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를 교육함으로써 각 기업의 사회적가치 평가를 활성화시키는 것 등이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되었음

- 이 때 추진주체로는 주로 중앙정부와 광역정부가 지목되었으며, 초·중고 대상 교육 측면에서만 기초정부가 지목되었음

○ 다음으로 지식·정보의 확산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대한 지역자원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기본 통계 구축, 공공구매/기업성과 입력 및 조회/사회적경제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이 동시에 가능한 통합정보 및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개발 및 우수사례 등 우수기업 정보의 체계적인 확산,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 등이 제시되었음

- 이를 위한 주요 추진 주체로는 중앙, 광역, 기초정부가 모두 제시되었는데, 사회적경제 기본통계 구축 및 관련 연구는 중앙정부가, 지역자원조사 등 사회적경제 관련 실태조사는 광역 및 기초정부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은 중앙 및 광역정부가, 사업모델 개발 및 우수사례의 확산 등은 중앙-광역-기초가 함께 추진해야 할 주체로 지목됨

○ 다음으로 관련기금 조성 등 사회적금융 활성화는 중앙 및 광역정부가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로 지목되었음

○ 마지막으로, 주민참여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가 자원봉사 등 시민사회 자원과 사회적경제를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 외 기초정부는 주민조직 양성 및 주민참여 확대, 사회혁신학교 등을 통한 주민 교육, 리빙랩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참여 지원 등을 수행해야 할 주요 주체로 지목되었음

〈표 18〉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주요 추진과제

구분	주요 역할	추진과제	추진주체
정책 및 전달체계	정책총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중앙, 광역, 기초
		정책 추진현황 점검/평가	중앙
		관련 정책 홍보	중앙
		주요 제도 개선(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	중앙
	거버넌스 구축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	중앙
		중앙-광역-기초 간 협의체 운영	중앙, 광역, 기초
		민관 협의체 운영	기초
		부서 간(지방정부 내) 협력체계 구축	광역, 기초
		당사자조직 네트워크 지원	기초
	공공부문 역할 확대	공공부문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확대	중앙, 광역, 기초
		전담부서 설치 등 직제조정	광역, 기초
		전문직위제 및 임기제 공무원 운영	광역, 기초
		전담인력 교육 강화	광역, 기초
		담당공무원 평가체계 개선	기초
	전달체계 지원	부처별/광역별 중간지원기관 통합운영	중앙, 광역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발굴, 처우개선 등	광역, 기초
사회적경제 인프라	인력양성	특성화대학 선정	중앙, 광역
		인재양성센터 등 인재양성방안 수립	중앙, 광역
		사회적가치 평가전문가 양성 및 교육	중앙, 광역
		초중고 대상 직장체험 등 교육	기초
	지식/정보 확산	사회적경제 기본통계 구축	중앙
		지역자원 등 실태조사	광역, 기초
		통합정보 및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운영(통계, 공공구매, 기업성과, 네트워크 등)	중앙, 광역
		사업모델 개발 및 우수사례 확산	광역, 기초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	중앙
		우수기업 정보 확산(사경기업 성과대회 등)	중앙, 광역
	사회적금융 활성화	관련 기금조성 등 사회적금융 활성화	중앙, 광역
	주민참여 활성화	자원봉사 등 시민사회 자원 연계	중앙
		주민조직 양성 및 주민참여 확대	기초
		사회혁신학교 등 주민교육	기초
		리빙랩 등 사회문제 해결 주민참여 지원	기초

2. 주요 추진과제 선정

- 2차 델파이 조사 및 3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각 전문가들에 의해 제시된 다양한 추진과제들에 대하여, 동의 수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음
 - 각 과제별 점수는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한 경우 5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1점으로 측정되었으며, 전문가들이 기입한 각 추진과제별 동의 수준의 평균점수 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동의 수준이 가장 높은 추진과제는 관련기금 조성 등 사회적금융 활성화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 주요 제도 개선이었으며, 다음으로 사업모델 개발 및 우수사례 확산과 주민조직 양성 및 주민참여 확대, 전담부서 설치 등 직제조정과 사회적경제 기본통계 구축 등으로 나타남
 - 31개 추진과제 중 동의 수준이 가장 낮은 과제는 특성화대학 선정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적경제 관련연구, 담당공무원 평가체계 개선, 전문직위제 및 임기제공무원 운영, 사회적가치 평가전문가 양성 및 교육 등으로 나타남
 - 추진과제 중 부문별로는 사회적금융 부문을 제외하면 주민참여 활성화 관련 과제에 대한 동의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평균 4.0), 그 다음으로 정책총괄(평균 3.9), 지식/정보 확산(3.85), 전달체계 지원(3.77) 등의 순이었으며, 인력양성에 대한 동의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19〉 추진과제별 전문가 동의 수준

주요 역할	추진과제	평균	표준 편차	순위
정책총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3.86	1.23	16
	정책 추진현황 점검/평가	3.64	0.93	21
	관련 정책 홍보	3.93	1.00	12
	주요 제도 개선(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	4.29	0.99	1
거버넌스 구축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	3.43	1.02	25
	중앙-광역-기초 간 협의체 운영	3.50	1.02	24
	민관 협의체 운영	4.07	0.83	8
	부서 간(지방정부 내) 협력체계 구축	3.93	0.47	12
	당사자조직 네트워크 지원	3.62	0.77	23
공공부문 역할 확대	공공부문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확대	4.00	1.11	11
	전담부서 설치 등 직제조정	4.14	0.86	5
	전문직위제 및 임기제 공무원 운영	3.21	0.97	26
	전담인력 교육 강화	4.07	0.73	8
	담당공무원 평가체계 개선	3.14	0.36	28
전달체계 지원	부처별/광역별 중간지원기관 통합운영	3.69	0.95	20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발굴, 처우개선 등	3.86	0.66	16
인력양성	특성화대학 선정	2.36	0.84	31
	인재양성센터 등 인재양성방안 수립	3.21	0.89	26
	사회적가치 평가전문가 양성 및 교육	3.14	0.86	28
	초중고 대상 직장체험 등 교육	3.79	0.80	18
지식/정보 확산	사회적경제 기본통계 구축	4.14	0.77	5
	지역자원 등 실태조사	3.93	0.62	12
	통합정보 및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운영(통계, 공공구매, 기업성과, 네트워크 등)	4.07	0.73	8
	사업모델 개발 및 우수사례 확산	4.21	0.70	3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	3.07	0.92	30
	우수기업 정보 확산(사경기업 성과대회 등)	3.64	0.84	21
사회적금융	관련 기금조성 등 사회적금융 활성화	4.29	0.91	1
주민참여 활성화	자원봉사 등 시민사회 자원 연계	3.93	0.92	12
	주민조직 양성 및 주민참여 확대	4.21	0.80	3
	사회혁신학교 등 주민교육	3.79	0.97	18
	리빙랩 등 사회문제 해결 주민참여 지원	4.14	0.95	5

3. 추진과제별 중요도

- 2차 델파이 조사 및 3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각 전문가들에 의해 제시된 다양한 추진과제들에 대한 중요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각 과제별 점수는 매우 중요하도로 응답한 경우 5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1점으로 측정되었으며, 전문가들이 기입한 각 추진과제별 중요성 평균점수 등은 다음과 같음
-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한 추진과제로 선정한 추진과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 주요 제도 개선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통합정보 및 성과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관련기금 조성 등 사회적금융 활성화, 사회적경제 기본통계 구축, 관련정책의 홍보 등의 순으로 나타남
 - 31개 추진과제 중 중요도 수준이 가장 낮은 과제는 특성화대학 선정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부처별/광역별 중간지원기관 통합운영, 전문직위제 및 임기제 공무원 운영,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 등으로 확인됨
 - 추진과제 중 부문별로는 사회적금융 부문을 제외하면 정책총괄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높았으며(평균 4.5), 그 다음으로 지식/정보 확산(4.20), 거버넌스 구축(4.16) 등의 순이었으며, 전달체계 지원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낮게 평가되었음

〈표 20〉 추진과제별 중요도

주요 역할	추진과제	평균	표준 편차	순위
정책총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4.50	0.85	6
	정책 추진현황 점검/평가	4.29	0.83	9
	관련 정책 홍보	4.57	0.65	3
	주요 제도 개선(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	4.71	0.61	1
거버넌스 구축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	4.07	0.73	17
	중앙-광역-기초 간 협의체 운영	4.07	0.73	17
	민관 협의체 운영	4.36	0.63	8
	부서 간(지방정부 내) 협력체계 구축	4.14	0.66	12
	당사자조직 네트워크 지원	4.14	0.77	12
공공부문 역할 확대	공공부문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확대	4.29	0.73	9
	전담부서 설치 등 직제조정	4.14	0.86	12
	전문직위제 및 임기제 공무원 운영	3.43	0.94	28
	전담인력 교육 강화	4.43	0.65	7
	담당공무원 평가체계 개선	3.86	0.77	23
전달체계 지원	부처별/광역별 중간지원기관 통합운영	3.31	0.75	30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발굴, 처우개선 등	3.93	0.62	20
인력양성	특성화대학 선정	3.29	0.83	31
	인재양성센터 등 인재양성방안 수립	3.86	0.95	23
	사회적가치 평가전문가 양성 및 교육	3.57	0.76	27
	초중고 대상 직장체험 등 교육	4.07	0.62	17
지식/정보 확산	사회적경제 기본통계 구축	4.57	0.76	3
	지역자원 등 실태조사	4.29	0.73	9
	통합정보 및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운영(통계, 공공구매, 기업성과, 네트워크 등)	4.64	0.63	2
	사업모델 개발 및 우수사례 확산	4.14	0.66	12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	3.43	0.85	28
	우수기업 정보 확산(사경기업 성과대회 등)	4.14	0.53	12
사회적금융	관련 기금조성 등 사회적금융 활성화	4.57	0.51	3
주민참여 활성화	자원봉사 등 시민사회 자원 연계	3.93	0.83	20
	주민조직 양성 및 주민참여 확대	3.86	0.77	23
	사회혁신학교 등 주민교육	3.79	0.89	26
	리빙랩 등 사회문제 해결 주민참여 지원	3.93	0.92	20

4. 주요 추진과제별 시급도

- 2차 델파이 조사 및 3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각 전문가들에 의해 제시된 다양한 추진과제들에 대한 시급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각 과제별 점수는 매우 중요하도로 응답한 경우 5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1점으로 측정되었으며, 전문가들이 기입한 각 추진과제별 중요성 평균점수 등은 다음과 같음
- 전문가들이 가장 시급한 추진과제로 선정한 추진과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 주요 제도 개선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공공부문 역할 확대를 위한 전담인력 교육 강화, 관련 기금 조성 등 사회적금융 활성화, 사회적경제 기본통계 구축, 통합정보 및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순으로 나타남
 - 31개 추진과제 중 시급도 수준이 가장 낮은 과제는 특성화대학 선정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전문직위제 및 임기제 공무원 운영,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 담당공무원 평가체계 개선, 부처별/광역별 중간지원기관 통합운영등으로 확인됨
 - 추진과제 중 부문별로는 사회적금융 부문을 제외하면 정책총괄에 대한 시급도가 가장 높았으며(평균 3.93), 그 다음으로 지식/정보 확산(3.90), 주민참여 활성화(3.89), 거버넌스 구축(3.87) 등의 순이었으며, 인력양성에 대한 시급도가 가장 낮게 평가되었음

〈표 21〉 추진과제별 시급도

주요 역할	추진과제	평균	표준 편차	순위
정책총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3.79	1.12	14
	정책 추진현황 점검/평가	3.64	0.74	23
	관련 정책 홍보	3.86	0.95	13
	주요 제도 개선(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	4.43	0.85	1
거버넌스 구축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	3.71	0.83	20
	중앙-광역-기초 간 협의체 운영	3.79	0.58	14
	민관 협의체 운영	3.93	0.92	11
	부서 간(지방정부 내) 협력체계 구축	4.21	0.70	4
	당사자조직 네트워크 지원	3.71	0.99	20
공공부문 역할 확대	공공부문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확대	4.07	0.92	8
	전담부서 설치 등 직제조정	3.79	0.89	14
	전문직위제 및 임기제 공무원 운영	3.14	0.95	30
	전담인력 교육 강화	4.36	0.63	2
	담당공무원 평가체계 개선	3.50	0.94	28
전달체계 지원	부처별/광역별 중간지원기관 통합운영	3.54	0.78	27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발굴, 처우개선 등	3.79	0.89	14
인력양성	특성화대학 선정	2.86	1.03	31
	인재양성센터 등 인재양성방안 수립	3.57	0.94	25
	사회적가치 평가전문가 양성 및 교육	3.71	0.73	20
	초중고 대상 직장체험 등 교육	3.57	0.94	25
지식/정보 확산	사회적경제 기본통계 구축	4.21	0.80	4
	지역자원 등 실태조사	4.14	0.86	7
	통합정보 및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운영(통계, 공공구매, 기업성과, 네트워크 등)	4.21	0.70	4
	사업모델 개발 및 우수사례 확산	3.93	0.62	11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	3.29	0.73	29
	우수기업 정보 확산(사경기업 성과대회 등)	3.64	0.84	23
사회적금융	관련 자금조성 등 사회적금융 활성화	4.29	0.73	3
주민참여 활성화	자원봉사 등 시민사회 자원 연계	3.79	0.89	14
	주민조직 양성 및 주민참여 확대	4.00	0.78	9
	사회혁신학교 등 주민교육	3.79	0.97	14
	리빙랩 등 사회문제 해결 주민참여 지원	4.00	0.88	9

5. 추진과제별 주체

- 2차 텔파이 조사 및 3차 텔파이 조사를 통해 각 전문가들에 의해 제시된 다양한 추진과제별 주요 추진주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각 추진 과제별 추진주체의 경우, 대부분이 둘 이상의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로 나타났으나, 특성화대학 선정 등과 같이 특정 정부의 역할이 전혀 기대되지 않는 과제들도 확인됨
- 먼저, 정책 총괄부문의 경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현황 점검/평가는 주로 중앙과 광역정부가 담당해야 할 역할로 나타났으며, 관련정책 홍보는 모든 정부가, 주요 제도 개선은 주로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다음으로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협의체는 중앙정부가, 중앙-광역-기초 간 협의체는 중앙 및 광역정부가, 민관 협의체와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당사자조직 네트워크 지원은 주로 광역 및 기초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평가됨
- 공공부문 역할 확대의 경우 대부분의 추진과제들이 중앙-광역-기초 모든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로 선정되었으나, 공무원의 전문 제고를 위한 방안(임기제 공무원 운영, 전담인력 교육 등)들의 경우 주로 광역 및 기초정부가 수행해야 할 과제로 지적됨
- 전달체계 지원은 주로 광역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인력양성 부문의 경우 특성화 대학 선정 및 사회적가치 평가전문가 양성

은 중앙정부, 초중고 대상 교육은 기초정부, 인재양성센터는 중앙 및 광역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지식/정보 확산의 경우, 사회적경제 기본 통계 구축은 주로 중앙정부가 추진할 과제로 선정되었으며, 지역자원조사 등 실태조사는 광역과 기초정부가, 통합정보시스템 개발과 사회적경제 관련연구, 그리고 우수기업 정보의 확산은 중앙 및 광역정부가, 사업모델 개발 및 우수사례 확산은 중앙, 광역, 기초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로 선정됨
- 관련 기금조성 등 사회적금융 활성화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세부 추진과제가 구체화되지 않아, 세부 과제별 추진주체를 선정하지는 못하였으나, 주로 광역정부와 중앙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 평가되었음
- 마지막으로 주민참여 활성화의 경우 모든 과제에서 기초정부를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주로 기초정부의 주도와 광역정부의 협력 하에 추진해야 할 것으로 평가됨

〈표 22〉 추진과제별 추진주체 비율

주요 역할	추진과제	중앙정부(%)	광역정부(%)	기초정부(%)
정책총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54.2	37.5	8.3
	정책 추진현황 점검/평가	52.0	36.0	12.0
	관련 정책 홍보	34.4	40.6	25.0
	주요 제도 개선(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	77.8	16.7	5.6
거버넌스 구축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	82.4	11.8	5.9
	중앙-광역-기초 간 협의체 운영	53.8	30.8	15.4
	민관 협의체 운영	12.0	44.0	44.0
	부서 간(지방정부 내) 협력체계 구축	7.7	50.0	4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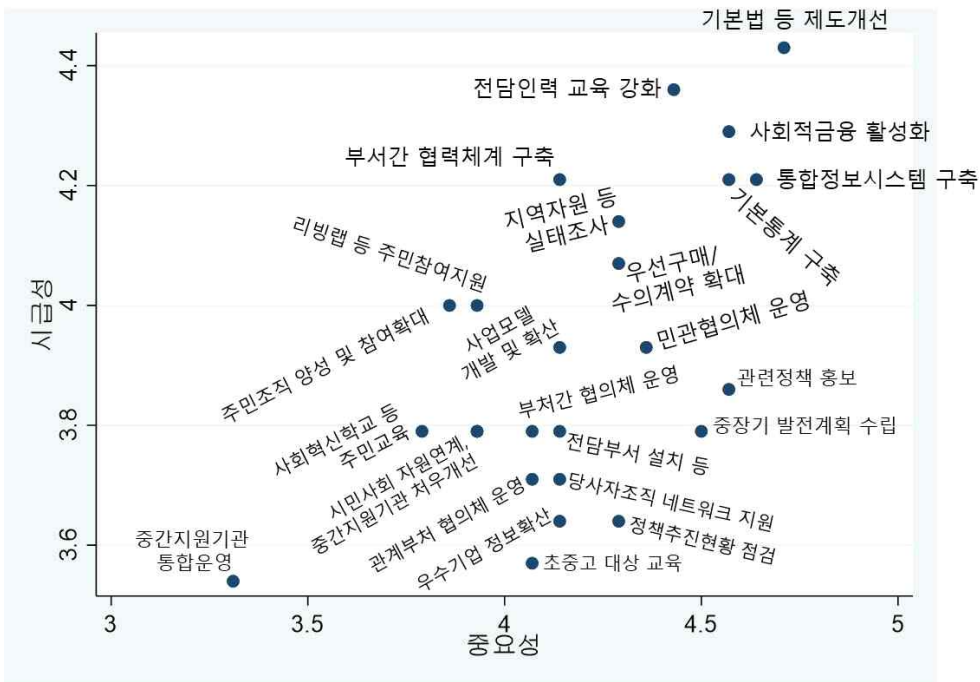
주요 역할	추진과제	중앙정부(%)	광역정부(%)	기초정부(%)
	당사자조직 네트워크 지원	21.4	32.1	46.4
공공부문 역할 확대	공공부문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확대	31.6	31.6	36.8
	전담부서 설치 등 직제조정	27.8	33.3	38.9
	전문직위제 및 임기제 공무원 운영	20.0	46.7	33.3
	전담인력 교육 강화	14.8	44.4	40.7
	담당공무원 평가체계 개선	29.6	48.1	22.2
전달체계 지원	부처별/광역별 중간지원기관 통합운영	40.0	52.0	8.0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발굴, 처우개선 등	20.0	52.0	28.0
인력양성	특성화대학 선정	73.7	26.3	0.0
	인재양성센터 등 인재양성방안 수립	45.8	45.8	8.3
	사회적가치 평가전문가 양성 및 교육	70.0	30.0	0.0
	초중고 대상 직장체험 등 교육	22.2	37.0	40.7
지식/정보 확산	사회적경제 기본통계 구축	59.1	36.4	4.5
	지역자원 등 실태조사	7.4	48.1	44.4
	통합정보 및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운영(통계, 공공구매, 기업성과, 네트워크 등)	44.4	44.4	11.1
	사업모델 개발 및 우수사례 확산	35.5	41.9	22.6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	50.0	46.2	3.8
	우수기업 정보 확산(사경기업 성과대회 등)	42.3	50.0	7.7
사회적금융	관련 자금조성 등 사회적금융 활성화	38.5	53.8	7.7
주민참여 활성화	자원봉사 등 시민사회 자원 연계	4.3	34.8	60.9
	주민조직 양성 및 주민참여 확대	0.0	22.2	77.8
	사회혁신학교 등 주민교육	5.3	26.3	68.4
	리빙랩 등 사회문제 해결 주민참여 지원	5.3	21.1	73.7

6. 종합

□ 지금까지 델파이 조사를 통해 확인된 추진과제별 과제 동의 수준, 중요도 및 시급도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 먼저, 전문가들의 추진과제 동의 수준에 대해 전체 추진 과제 중 평균 점수가 3.5 미만으로 나온 7개 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추진 과제는 총 31개 과제 중 24개에 해당
- 24개 추진 과제를 각각 중요도와 시급도에 따라 구분할 때, 양자 모두에서 높은 점수가 나온 항목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 주요제도 개선, 전담인력 교육 강화, 관련 기금조성 등 사회적금융 활성화, 사회적경제 기본통계 구축, 통합정보 및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임

〈그림 3〉 추진과제별 중요도 및 시급도



〈표 23〉 주요 추진과제별 중요도 및 시급도

주요 역할	추진과제	동약수준	중요도	시급도
정책총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3.86	4.50	3.79
	정책 추진현황 점검/평가	3.64	4.29	3.64
	관련 정책 홍보	3.93	4.57	3.86
	주요 제도 개선(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	4.29	4.71	4.43
거버넌스 구축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	3.43	4.07	3.71
	중앙-광역-기초 간 협의체 운영	3.50	4.07	3.79
	민관 협의체 운영	4.07	4.36	3.93
	부서 간(지방정부 내) 협력체계 구축	3.93	4.14	4.21
	당사자조직 네트워크 지원	3.62	4.14	3.71
공공부문 역할 확대	공공부문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확대	4.00	4.29	4.07
	전담부서 설치 등 직제조정	4.14	4.14	3.79
	전담인력 교육 강화	4.07	4.43	4.36
전달체계 지원	부처별/광역별 중간지원기관 통합운영	3.69	3.31	3.54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발굴, 처우개선 등	3.86	3.93	3.79
인력양성	초중고 대상 직장체험 등 교육	3.79	4.07	3.57
지식/정보 확산	사회적경제 기본통계 구축	4.14	4.57	4.21
	지역자원 등 실태조사	3.93	4.29	4.14
	통합정보 및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운영(통계, 공공구매, 기업성과, 네트워크 등)	4.07	4.64	4.21
	사업모델 개발 및 우수사례 확산	4.21	4.14	3.93
	우수기업 정보 확산(사경기업 성과대회 등)	3.64	4.14	3.64
사회적금융	관련 자금조성 등 사회적금융 활성화	4.29	4.57	4.29
주민참여 활성화	자원봉사 등 시민사회 자원 연계	3.93	3.93	3.79
	주민조직 양성 및 주민참여 확대	4.21	3.86	4.00
	사회혁신학교 등 주민교육	3.79	3.79	3.79
	리빙랩 등 사회문제 해결 주민참여 지원	4.14	3.93	4.00

□ 이 중 중요도 및 시급도 상위 10개 과제(위 그림을 4분면으로 구분할 때 우측 상단에 해당하는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각각의 추진주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중앙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 제도 개선과 사회적경제 기본 통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관련정책 홍보 및 공공부문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확대가 있으며,
- 지방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지방정부 내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지역자원 등 실태조사, 민관 협의체 운영, 전담인력 교육 강화 등이 있음

〈표 24〉 주요 추진과제별 중요도 및 시급도 상위 10개 과제

추진 주체	추진과제	중앙정부	광역정부	기초정부
중앙 정부	주요 제도 개선(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	77.8	16.7	5.6
	사회적경제 기본통계 구축	59.1	36.4	4.5
	통합정보 및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운영	44.4	44.4	11.1
	관련 기금조성 등 사회적금융 활성화	38.5	53.8	7.7
	관련 정책 홍보	34.4	40.6	25.0
	공공부문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확대	31.6	31.6	36.8
	부서 간(지방정부 내) 협력체계 구축	7.7	50.0	42.3
	지역자원 등 실태조사	7.4	48.1	44.4
지방 정부	민관 협의체 운영	12.0	44.0	44.0
	전담인력 교육 강화	14.8	44.4	40.7



제Ⅳ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과요약

- 중앙정부는 2017년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을 시작으로, 지역중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가 담당해야 할 주요 역할이 무엇인지, 어떻게 추진·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루어진 바 없음
- 이 연구에서는 최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추진해온 정책들을 살펴보고, 지역 중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각각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특히 지자체에서 시급하게 추진·관리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살펴봄으로써, 지역중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먼저, 중앙정부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2007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들이 현 정부에 들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함
 - 이 때, 각 사회적경제기업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부처가 서로 다른 발전전략을 바탕으로 각자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



- 다음으로 지방정부에서는 각각 조례를 기반으로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제도화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
 - 지역의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의 주요한 수행 주체라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시도별로 설치 및 운영 현황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
- 여전히 각 지역별로 사회적경제 관련 제도적 환경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중앙정부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이 지역 중심으로 재편되기 위해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바탕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선정하였음
 - 이 때, 기초·광역 지자체, 중간지원기관, 학계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14명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조사결과 나타난 중요도·시급도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10개 과제를 선정하였음
- 먼저, 중앙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 제도 개선과 사회적경제 기본 통계를 구축 등이 제시됨
- 다음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관련정책 홍보 및 공공부문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확대가 제기되었으며, 지방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지방정부 내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지역자원 등 실태조사, 민관 협의체 운영, 전담인력 교육 강화 등이 있음
- 그런데, 이상의 추진과제들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왔던 과제

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당초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는데 공통점이 있음

- 이는 과제 그 자체의 중요성만큼이나 그 관리방안이 중요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로, 아래에서는 특히 지방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 중 일부에 대한 관리방안을 예시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제2절 정책제언: 지방정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 관리방안(예시)

1. 합동평가 개요

- 이 절에서는 지방정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 중 민관 협의체 운영을 사례로 지자체 합동평가를 활용한 관리방안을 예시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 지자체 합동평가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21조)을 근거로 국정 주요시책 등의 지자체 추진상황을 평가·환류하여 국정의 통합성·효율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평가임
 - 합동평가는 국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앙정부가 위임한 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의 주요 시책 등에 대해 점검하는데, 과거 중앙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평가를 2009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합동평가로 통합하였음(한국행정연구원, 2015: 26)
 - 합동평가의 평가결과는 점수를 공개하지는 않지만 우수등급 발표 및 재정인센티브 차등지급이 이루어지므로 지방정부에 대한 합동평가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문제점도 지적(한국행정연구원, 2015: 27)되고 있으나, 동시에 중앙정부가 국가 시책을 지방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함

2. 사회적경제 관련 지표

- 2021년 합동평가지표('20년 실적)는 ①국민이 주인인 정부, ②더불어 잘 사는 경제, ③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④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⑤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총 5개 분야 116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중 사회적경제와 관련 있는 지표로는 사회적경제 분야 우선구매율 지표와 사회성과보상사업(SIB) 기반 조성 우수사례 지표 등이 있음
- 먼저, 사회적경제 분야 우선구매율 지표는 국정목표②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국정과제 2-2-4.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표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해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구매를 지원하여 사회적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도모하고자 관련 실적을 평가함
 - 이 때, 사회적경제 구매율은 자활용사춘 복지공장,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 시설 인증받은 기업의 구매액 합을 총 구매액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으로 측정됨
- 다음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SIB) 기반 조성 우수사례 지표는 사회성과 보상사업의 기반조성을 위해 지자체에서 현장조사, 주민의견 수렴, 운영기관 공모 등의 사업 가능성을 모색했는가에 대한 평가로, 사회성과보상 사업을 발굴하고 전 지자체로 확산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를 부분적으로 평가하여 그 가능성과 한국형 모델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때, 측정은 정성평가로,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사례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를 실시하며, 지자체 단

위 주민 의견수렴, 공통된 사회문제 정리, 주민 공청회 개최, 전문가 의견 청취, 민간투자자·운영기관·수행기관 발굴 등 사업 수행을 위한 기반 조성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우수사례 평가 세부기준은 주민의견 수렴, 관련분야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이 50%, 민간투자자·운영기관 등 발굴을 위한 공개모집, 홍보, 주민 공청회 및 교육 등의 기반조성이 30%, 지자체 간 정보공유 등을 위한 협업노력이 20%이며,
- 평가 대상은 서울, 경기도, 충남, 전북, 전남, 강원, 대구, 부산 등 8개 광역시로 '17년 및 '18년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지자체에 한함

3. 지표예시(안)

- 합동평가는 중앙정부의 위임기능이나 재정지원 분야를 대상으로 해야하며, 투입이나 활동 등의 수단적 내용보다는 지자체가 추진한 정책이나 사업의 결과로서의 성과가 반영되어야 함(한국행정연구원, 2015: 35)
- 따라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추진과제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먼저, 지표명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업체 운영 우수사례로, 시도별 우수사례 1건을 합동평가단에 제출하여 정성평가 시행
 - 민관협업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과제 발굴 및 협조체계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민관협업체 운영상황을 점검
 - 이 때, 측정은 정성평가로, 사회적경제 민관협업체 운영사례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를 실시하며, 지자체 단위 민관협업체

운영을 위한 행정역량 투입정도,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한 정도, 참여 주체의 다양성, 협의체 내 결정사항의 시책 반영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표 25〉 지표예시(안)

국정 목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 전략	2-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국정 과제	2-2-4. 사회적경제 활성화						
평가 지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우수사례						
지표 유형	①	정성	②	공통	③	정순	
지표 설명	지표명 설명	○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우수사례를 1건씩 제출하여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평가 필요성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 관심도 제고 및 민관협의체 운영 현황 점검					
	기대효과	○ 민관협업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과제 발굴 및 협조체계 강화					
측정 방법	○ 산식설명 ㉠ 사회적경제 민관협의체 우수사례(1건) - (평가방향) 자치단체 우수시책에 대한 추진과정, 추진성과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고려하여 ① 자치단체 노력도 ② 참여도 ③연계·협력성 3가지 기준으로 평가 - (실적인정기준) '20년 이전부터 추진하여 '20년에 실제로 실행된 경우도 인정						
	분야	평가기준		평가내용			
	공통 기준	지자체 노력도(30%)		· 민관협의체 운영을 위한 행정역량 투입정도(제도 정비, 계획마련 등) ·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한 정도			
		참여도(40%)		· 민관협의체 참여 주체가 성별, 연령, 사회적경제 기업 유형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했는지 여부			
		연계·협력성(30%)		· 참여 주체의 반복 참여율 및 사전 의견수렴 여부 · 협의체 내 결정사항의 시책 반영 노력			

제3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이 연구에서는 지역 중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각각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특히 지방정부에서 시급하게 추진·관리해야 할 정책과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음
 - 3회에 걸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바탕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가 각각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들을 살펴본 이 연구는, 향후 지역 중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각 주체가 주로 고려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 및 역할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첫째, 전문가 델파이 조사의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를 조사대상에 포함하지 못함으로써, 정부의 추진과제 Pool 선정에 일부 편향이 있을 수 있음
 - 둘째, 1차 조사에서 정부의 정책과제 선정 조사시, 객관성 확보를 목적으로 완전 개방형 질문을 시행함으로써, 응답된 정책과제들 간 구체성에 서로 차이가 발생, 결과적으로 2~3차 조사결과의 타당성 확보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
 - 셋째, 조사결과 제시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추진 과제는 그 동안 정부, 학계 및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과제들로, 실제 추진 과제보다는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화방안이 보다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 예시적으로 하나의 관리방안만을 제시하였으며, 이 또한 정교화된 관리방안이라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주요 과제들에 대해,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보다 구체화된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2단계 혁신성장전략 ('18~'22)

관계부처 합동. 2018.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_____. 2018.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_____. 2018.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기본계획('18~'22)

_____. 2019a.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계획

_____. 2019b.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

_____. 2019c. 지역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방안

_____. 2020a.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

_____. 2020b.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_____. 2020c.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_____. 2020d.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관계부처 합동·문화체육관광부. 2017. 사회통합적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Legacy) 창출 방안

교육부. 2018.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

국토교통부. 2018.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관리 협동조합 사업 추

진방안

- _____. 2019.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
- 기획재정부. 2020.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 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 2019. 복권기금의 사회적 가치 제고 방안
- 강용주. 2008. 델파이 기법의 이해와 적용사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2단계 혁신성장전략 ('18~'22)
- 농림축산식품부. 2019. 사회적 농업 확산을 위한 추진 전략
- 보건복지부. 2018.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017.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 _____. 2019.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서비스·일자리 창출방안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0a. 한 손에 잡히는 사회적기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0b. 내부자료
- 행정안전부. 2020.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 한국행정연구원. 2015. 2015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개선방안 연구.

부록1

전문가 델파이 조사 설문지

지자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 내어 본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델파이 조사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진행 중인 지자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특히, 우리나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수준을 점검·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 Pool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에는 응답하신 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개별 의견은 취합되어 더 나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본 델파이 조사는 연구 목적의 특성상 특정한 방향의 응답을 원하거나 정답이 존재하지 않으며 전문가님께서 업무 또는 연구 활동을 토대로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의견을 솔직하게 작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델파이 조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며, 상기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본 연구에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본 델파이 조사의 문항과 기타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 소 속: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지원실 정책연구팀
- 이 름: 김진영 과장
- 전 화: 031-697-7773(010-7298-1225)
- 이메일: jykim@ikose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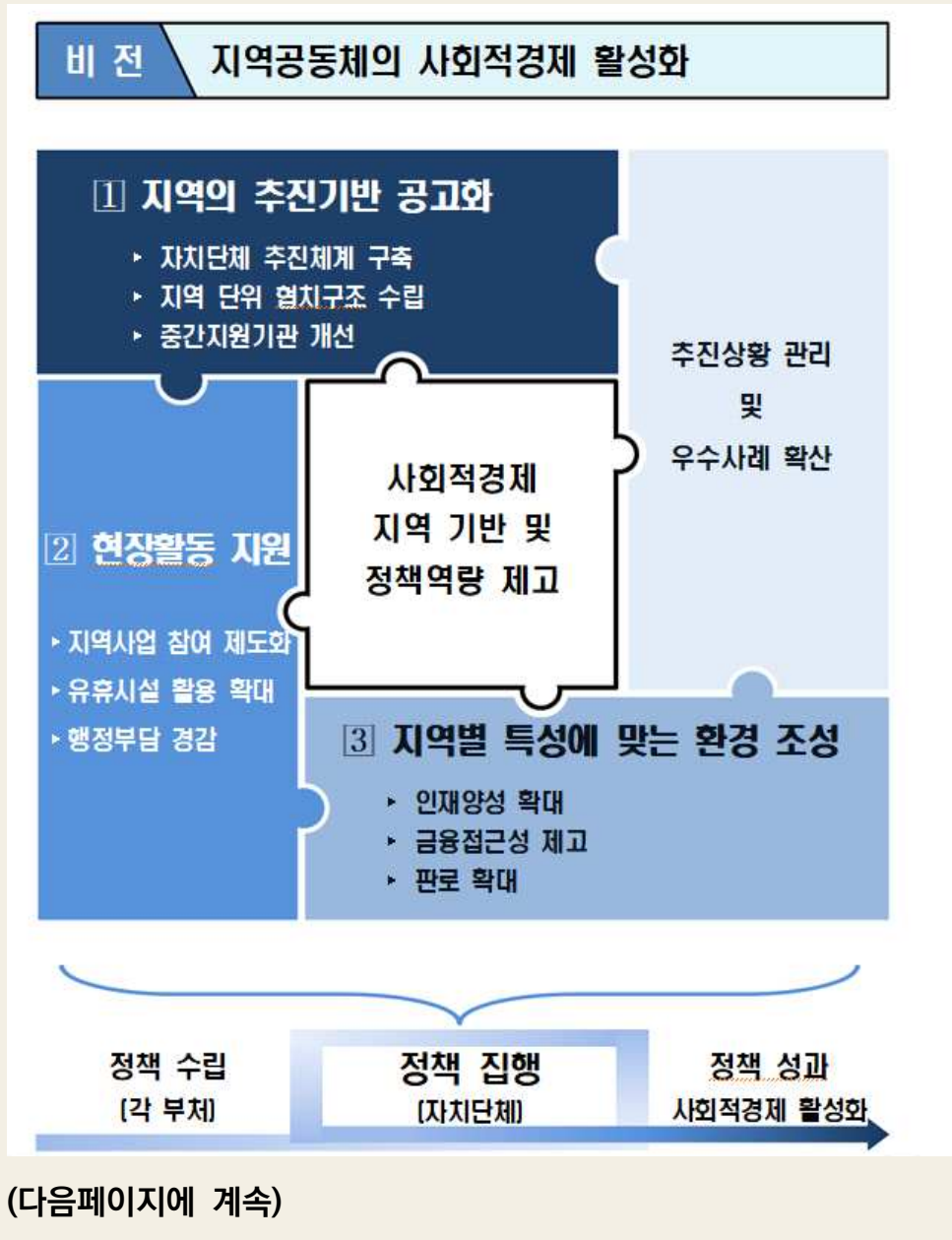
* 조사에 응답하시기 전,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응답 부탁드립니다.

■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목록

연도	정책명	발표일	발표주체
2017	①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10. 18	관계부처 합동
	② 사회통합적 평창동계올림픽 유산(Legacy) 창출 방안	12. 22	관계부처 합동
2018	③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2. 8	관계부처 합동
	④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5. 16	관계부처 합동
	⑤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7. 3	관계부처 합동
	⑥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2단계 혁신성장전략('18~'22)	7. 5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⑦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7. 26	보건복지부
	⑧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관리 협동조합 사업 추진방안	7. 26	국토교통부
	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	9. 6	교육부
	⑩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18~'22)	11. 9	관계부처 합동
2019	⑪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	2. 19	국토교통부
	⑫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계획	3. 21	관계부처 합동
	⑬ 사회적 농업 확산을 위한 추진 전략	3. 25	농림축산식품 부
	⑭ 복권기금의 사회적 가치 제고 방안	4. 26	복권위원회
	⑮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서비스·일자리 창출방안	9. 3	관계부처 합동
	⑯ 지역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방안	11. 5	관계부처 합동
	⑰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	12. 5	관계부처 합동
2020	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	15	관계부처 합동
	⑲ 제 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2)	3. 31	기획재정부
	㉠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7. 22	관계부처 합동
	㉡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8. 13	관계부처 합동

■ 지역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방안(관계부처 합동, '19.11.)

1. 비전 및 추진방향





2. 세부과제별 추진체계(요약)

구분	과제내용	기관
지역의 추진 기반 공고화	1. 자치단체 추진체계	
	가. 조례 및 전담부서 정비	
	· 자치법규(안) 마련, 운영실태 점검·지원	행안부
	· 사회적경제 전담조직 역할 강화, 제도화	행안부, 자치단체
	나. 조정기능 강화	
	· 부단체장 중심의 행정협의회 제도화	자치단체
	· 중앙·지방협의체 운영을 통한 현장~중앙 연계	행안부, 자치단체
	· 행정협의회 운영 성과 점검 및 평가 반영	행안부
	다. 업무담당자 전문성 제고	
	· 표준 교육안을 통한 지방공무원 교육과정 확대	행안부
	· 사회적경제 전문직위 운영을 위한 지침 개정	행안부
	2. 민·관 협치체계	
	· 민·관협업을 위한 사회적경제위원회 제도화	자치단체
	· 민·관 간 연계 및 농·수·실험 참여 제도화	자치단체
	· 사회적경제위원회 운영 실적 점검·평가 반영	행안부
	3. 중간지원기관 개선	
	· 자치단체 및 중간지원기관들 간 협업 제도화	행안부, 자치단체
	· 시·도 중간지원기관 통합·연계 지원	행안부, 시·도
	· 시·군·구 중간지원기관 개편·신설 추진	자치단체
현장 활동 지원	1. 지역사업 참여 확대	
	· 사회적경제의 사업 연계를 위한 행정협의회 운영	자치단체
	· 참여 사업·분야 지속 발굴 및 인센티브 명시	기재부, 각부처
	2. 유희시설 활용 확대	
	· 유희 국유재산 활용방안 마련시 수의매각 검토	기재부
	· 유희 공유재산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임대	자치단체
	3. 행정부담 경감	
	· 사회적기업의 4대 보험 관련 서류 등 감축	고용부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환경 조성	1. 인재양성 확대	
	· 현장 중심 맞춤형 교육 실시	자치단체
	· 자치단체의 인재양성을 조례 및 추진계획 반영	행안부, 자치단체
	· 자치단체 교육실적 평가 반영 및 우수사례 발굴	행안부
	·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 활성화 지원	교육부, 시·도
	2. 금융접근성 제고	
	· 사회적가치를 반영한 투·융자시 컨설팅 지원	자치단체 등
	· 사회적경제 관련 자금 모델 발굴, 공유	행안부
	3. 판로 확대	
	· 우선구매 등 구매촉진 적용기관 조례 명시	행안부, 자치단체
	· 자활기업의 판로정책대상 포함, 실적 평가	행안부, 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간접구매 확대	시·도
	· 수의계약 관련 공공기관 내부지침·조례 개정	행안부, 자치단체
	· 시·도 시행계획상 구매목표 반영	자치단체

※ 아래의 주어진 각 문항에 대하여 전문가님의 솔직한 답변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할 핵심적인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2개 이상)

* 중앙-광역-기초의 협력업무의 경우, 주된 주체의 역할과 노력 서술

구분	중앙정부
주요역할	① 예시) 관련 법 제정, 부처 간 관련 사업 조정, 자자체 평가/관리, 대국민 홍보 등
	* 필요성 서술
	②
	* 필요성 서술

1-2. 앞서 답하신 역할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해야할 장·단기적 노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장·단기 각 2개 이상)

* 중앙-광역-기초의 협력업무의 경우, 주된 주체의 역할과 노력 서술

구분		중앙정부
필요노력	장기적	① 예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협의, 정기 부처 협의회 운영, 관련통계 구축 등
		* 세부내용 및 추진시 고려사항 서술
		②
		* 세부내용 및 추진시 고려사항 서술
	단기적	①
		* 세부내용 및 추진시 고려사항 서술
		②
		* 세부내용 및 추진시 고려사항 서술

2-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핵심적인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2개 이상)

* 중앙-광역-기초의 협력업무의 경우, 주된 주체의 역할과 노력 서술

구분	광역자치단체
주요역할	① 예시) 광역단위 관련사업 총괄, 민관협력 활성화 등
	* 필요성 서술
	②
	* 필요성 서술

2-2. 앞서 답하신 역할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에서 해야할 장·단기적 노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장·단기 각 2개 이상)

* 중앙-광역-기초의 협력업무의 경우, 주된 주체의 역할과 노력 서술

구분		광역자치단체
필요 노력	장기적	① 예시) 연간/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지자체 행정협의회 운영 등
		* 세부내용 및 추진시 고려사항 서술
	단기적	②
		* 세부내용 및 추진시 고려사항 서술

3-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핵심적인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2개 이상)

* 중앙-광역-기초의 협력업무의 경우, 주된 주체의 역할과 노력 서술

구분	기초자치단체
주요역할	① 예시) 주민참여 활성화, 주민조직 양성, 사회적경제기업 물품구매 등
	* 필요성 서술
	②
	* 필요성 서술

3-2. 앞서 답하신 역할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할장 · 단기적 노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장 · 단기 각 2개 이상)

* 중앙-광역-기초의 협력업무의 경우, 주된 주체의 역할과 노력 서술

구분		기초자치단체
필요 노력	장기적	① 예시) 주민교육, 민관협의회 운영, 수의계약 확대, 전담부서 설치 및 업무 담당자 교육 등
		* 세부내용 및 추진시 고려사항 서술
		②
		* 세부내용 및 추진시 고려사항 서술
	단기적	① 예시) 주민교육, 민관협의회 운영, 수의계약 확대, 전담부서 설치 및 업무 담당자 교육 등
		* 세부내용 및 추진시 고려사항 서술
		②
		* 세부내용 및 추진시 고려사항 서술

- 1차 델파이 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전문가 델파이 2차 조사 설문지

지자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 내어 본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델파이 조사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진행 중인 지자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특히,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활성화 수준을 점검·평가할 수 있는 지표 Pool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에는 응답하신 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개별 의견은 취합되어 더 나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본 델파이 조사는 연구 목적의 특성상 특정한 방향의 응답을 원하거나 정답이 존재하지 않으며 전문가님께서 업무 또는 연구 활동을 토대로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의견을 솔직하게 작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델파이 조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며, 상기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본 연구에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본 델파이 조사의 문항과 기타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 소 속: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지원실 정책연구팀
- 이 름: 김진영 과장
- 전 화: 031-697-7773(010-7298-1225)
- 이메일: jykim@ikosea.or.kr



* 아래는 지난 1차 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 조사 결과를 간략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응답 부탁드립니다.

■ 1차 델파이 조사결과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광역·지방정부 추진과제			
구분	주요 역할	추진과제	추진주체
정책 및 전달체계	정책총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중앙, 광역, 지방
		정책 추진현황 점검/평가	중앙
		관련 정책 홍보	중앙
		주요 제도 개선(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	중앙
	거버넌스 구축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	중앙
		중앙-광역-기초 간 협의체 운영	중앙, 광역, 기초
		민관 협의체 운영	기초
		부서 간(지방정부 내) 협력체계 구축	광역, 기초
	공공부문 역할 확대	당사자조직 네트워크 지원	기초
		공공부문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확대	중앙, 광역, 기초
		전담부서 설치 등 직제조정	광역, 기초
		전문직위제 및 임기제 공무원 운영	광역, 기초
		전담인력 교육 강화	광역, 기초
	전달체계 지원	담당공무원 평가체계 개선	기초
		부처별/광역별 중간지원기관 통합운영	중앙, 광역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발굴, 처우개선 등	광역, 기초
사회적경제 인프라	인력양성	특성화대학 선정	중앙, 광역
		인재양성센터 등 인재양성방안 수립	중앙, 광역
		사회적가치 평가전문가 양성 및 교육	중앙, 광역
		초중고 대상 직장체험 등 교육	기초
	지식/정보 확산	사회적경제 기본통계 구축	중앙
		지역자원 등 실태조사	광역, 기초
		통합정보 및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운영(통계, 공공구매, 기업성과, 네트워크 등)	중앙, 광역
		사업모델 개발 및 우수사례 확산	광역, 기초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	중앙
		우수기업 정보 확산(사경기업 성과대회 등)	중앙, 광역
	사회적금융	관련 기금조성 등 사회적금융 활성화	중앙, 광역
	주민참여 활성화	자원봉사 등 시민사회 자원 연계	중앙
		주민조직 양성 및 주민참여 확대	기초
		사회혁신학교 등 주민교육	기초
		리빙랩 등 사회문제 해결 주민참여 지원	기초

※ 아래의 각 문항에 대해 전문가님의 솔직한 답변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아래는 전문가들이 제안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입니다. 아래 각 과제를 추진해야 할 핵심 주체에 O표 해주십시오(중복선택 가능).

구분	주요 역할	추진과제	추진주체		
			중앙	광역	기초
정책 및 전달체계	정책총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정책 추진현황 점검/평가			
		관련 정책 홍보			
		주요 제도 개선(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			
	거버넌스 구축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			
		중앙-광역-기초 간 협의체 운영			
		민관 협의체 운영			
		부서 간(지방정부 내) 협력체계 구축			
	공공부문 역할 확대	당사자조직 네트워크 지원			
		공공부문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확대			
		전담부서 설치 등 직제조정			
		전문직위제 및 임기제 공무원 운영			
	전달체계 지원	전담인력 교육 강화			
		담당공무원 평가체계 개선			
사회적경제 인프라	인력양성	특성화대학 선정			
		인재양성센터 등 인재양성방안 수립			
		사회적가치 평가전문가 양성 및 교육			
		초중고 대상 직장체험 등 교육			
	지식/정보 확산	사회적경제 기본통계 구축			
		지역자원 등 실태조사			
		통합정보 및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통계, 공공구매, 기업성과, 네트워크 등)			
		사업모델 개발 및 우수사례 확산			
	사회적금융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			
		우수기업 정보 확산(사경기업 성과대회 등)			
		관련 기금조성 등 사회적금융 활성화			
		자원봉사 등 시민사회 자원 연계			
	주민참여 활성화	주민조직 양성 및 주민참여 확대			
		사회혁신학교 등 주민교육			
		리빙랩 등 사회문제 해결 주민참여 지원			



2. 아래는 전문가들이 제안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입니다. 아래 추진과제의 “중요성”에 대하여,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해당하는 보기에 O표 해주십시오(1개만 선택).

추진과제	필요성				
	전혀 중요하 지 않다	별로 중요하 지 않다	보통이 다	약간 중요하 다	매우 중요하 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정책 추진현황 점검/평가					
관련 정책 홍보					
주요 제도 개선(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					
중앙-광역-기초 간 협의체 운영					
민관 협의체 운영					
부서 간(지방정부 내) 협력체계 구축					
당사자조직 네트워크 지원					
공공부문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확대					
전담부서 설치 등 직제조정					
전문직위제 및 임기제 공무원 운영					
전담인력 교육 강화					
담당공무원 평가체계 개선					
부처별/광역별 중간지원기관 통합운영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발굴, 처우개선 등					
특성화대학 선정					
인재양성센터 등 인재양성방안 수립					
사회적가치 평가전문가 양성 및 교육					
초중고 대상 직장체험 등 교육					
사회적경제 기본통계 구축					
지역자원 등 실태조사					
통합정보 및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운영통계 공공구매 기업성과 네트워크 등					
사업모델 개발 및 우수사례 확산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					
우수기업 정보 확산(사경기업 성과대회 등)					
관련 기금조성 등 사회적금융 활성화					
자원봉사 등 시민사회 자원 연계					
주민조직 양성 및 주민참여 확대					
사회혁신학교 등 주민교육					
리빙랩 등 사회문제 해결 주민참여 지원					

3. 아래는 전문가들이 제안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입니다. 아래 추진과제의 “시급성”에 대하여,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해당하는 보기에 O표 해주십시오(1개만 선택).

추진과제	필요성				
	전혀 시급하 지않다	별로 시급하 지않다	보통이 다	약간 시급하 다	매우 시급하 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정책 추진현황 점검/평가					
관련 정책 홍보					
주요 제도 개선(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					
중앙-광역-기초 간 협의체 운영					
민관 협의체 운영					
부서 간(지방정부 내) 협력체계 구축					
당사자조직 네트워크 지원					
공공부문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확대					
전담부서 설치 등 직제조정					
전문직위제 및 임기제 공무원 운영					
전담인력 교육 강화					
담당공무원 평가체계 개선					
부처별/광역별 중간지원기관 통합운영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발굴, 처우개선 등					
특성화대학 선정					
인재양성센터 등 인재양성방안 수립					
사회적가치 평가전문가 양성 및 교육					
초중고 대상 직장체험 등 교육					
사회적경제 기본통계 구축					
지역자원 등 실태조사					
통합정보 및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통계, 공공구매, 기업성과, 네트워크 등)					
사업모델 개발 및 우수사례 확산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					
우수기업 정보 확산(사경기업 성과대회 등)					
관련 기금조성 등 사회적금융 활성화					
자원봉사 등 시민사회 자원 연계					
주민조직 양성 및 주민참여 확대					
사회혁신학교 등 주민교육					
리빙랩 등 사회문제 해결 주민참여 지원					

4. 아래는 전문가들이 제안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입니다. 아래 추진과제를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평가지표 Pool로 구성하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해당하는 보기에 O표 해주십시오(1개만 선택).

추진과제	필요성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정책 추진현황 점검/평가					
관련 정책 홍보					
주요 제도 개선(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					
중앙-광역-기초 간 협의체 운영					
민관 협의체 운영					
부서 간(지방정부 내) 협력체계 구축					
당사자조직 네트워크 지원					
공공부문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확대					
전담부서 설치 등 직제조정					
전문직위제 및 임기제 공무원 운영					
전담인력 교육 강화					
담당공무원 평가체계 개선					
부처별/광역별 중간지원기관 통합운영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발굴, 처우개선 등					
특성화대학 선정					
인재양성센터 등 인재양성방안 수립					
사회적가치 평가전문가 양성 및 교육					
초중고 대상 직장체험 등 교육					
사회적경제 기본통계 구축					
지역자원 등 실태조사					
통합정보 및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통계, 공공구매, 기업성과, 네트워크 등)					
사업모델 개발 및 우수사례 확산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					
우수기업 정보 확산(사경기업 성과대회 등)					
관련 기금조성 등 사회적금융 활성화					
자원봉사 등 시민사회 자원 연계					
주민조직 양성 및 주민참여 확대					
사회혁신학교 등 주민교육					
리빙랩 등 사회문제 해결 주민참여 지원					

5. 위에 제시되었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 외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평가지표로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는 추진과제가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추진과제	
필요성	

-2차 토폴이 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문가 델파이 3차 조사 설문지

지자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3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 내어 본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델파이 조사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진행 중인 지자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특히,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활성화 수준을 점검·평가할 수 있는 지표 Pool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에는 응답하신 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개별 의견은 취합되어 더 나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본 델파이 조사는 연구 목적의 특성상 특정한 방향의 응답을 원하거나 정답이 존재하지 않으며 전문가님께서 업무 또는 연구 활동을 토대로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의견을 솔직하게 작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델파이 조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며, 상기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본 연구에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본 델파이 조사의 문항과 기타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 소 속: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지원실 정책연구팀
- 이 름: 김진영 과장
- 전 화: 031-697-7773(010-7298-1225)
- 이메일: jykim@ikosea.or.kr

* 아래는 지난 2차 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별 추진 주제, 중요성, 시급성, 지표 동의 수준 등 조사 결과를 간략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응답 부탁드립니다.

■ 2차 델파이 조사결과(1): 추진과제별 적정 추진 주제					
구분	주요 역할	추진과제	응답비율		
			중앙	광역	기초
정책 및 전달 체계	정책총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50%	35%	15%
		정책 추진현황 점검/평가	48%	36%	16%
		관련 정책 홍보	40%	37%	23%
		주요 제도 개선(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	70%	20%	10%
	거버넌스 구축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	76%	18%	6%
		중앙-광역-기초 간 협의체 운영	52%	32%	16%
		민관 협의체 운영	15%	46%	38%
		부서 간(지방정부 내) 협력체계 구축	8%	56%	36%
		당사자조직 네트워크 지원	25%	33%	42%
	공공부문 역할 확대	공공부문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확대	31%	31%	39%
		전담부서 설치 등 직제조정	30%	30%	40%
		전문직위제 및 임기제 공무원 운영	24%	41%	34%
		전담인력 교육 강화	25%	39%	36%
		담당공무원 평가체계 개선	29%	46%	25%
	전달체계 지원	부처별/광역별 중간지원기관 통합운영	39%	52%	9%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발굴, 처우개선 등	24%	52%	24%
사회적경제 인프라	인력양성	특성화대학 선정	68%	32%	0%
		인재양성센터 등 인재양성방안 수립	45%	45%	9%
		사회적가치 평가전문가 양성 및 교육	65%	35%	0%
		초중고 대상 직장체험 등 교육	28%	40%	32%
	지식/정보 확산	사회적경제 기본통계 구축	62%	33%	5%
		지역자원 등 실태조사	15%	42%	42%
		통합정보 및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운영(통계, 공공구매, 기업성과, 네트워크 등)	44%	44%	12%
		사업모델 개발 및 우수사례 확산	33%	41%	26%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	54%	42%	4%
		우수기업 정보 확산(사경기업 성과대회 등)	39%	43%	18%
	사회적금융 활성화	관련 기금조성 등 사회적금융 활성화	38%	46%	15%
	주민참여 활성화	자원봉사 등 시민사회 자원 연계	13%	33%	54%
		주민조직 양성 및 주민참여 확대	5%	21%	74%
		사회혁신학교 등 주민교육	10%	25%	65%
		리빙랩 등 사회문제 해결 주민참여 지원	11%	22%	67%

■ 2차 델파이 조사결과(2): 중요성, 시급성, 지표동의 수준에 대한 전문가 조사결과 평균점수 및 표준편차

주요 역할	추진과제	중요성 평균(SD)	시급성 평균(SD)	지표동의 평균(SD)
정책총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4.43(0.94)	3.93(1.27)	3.93(1.27)
	정책 추진현황 점검/평가	4.14(0.86)	3.71(0.91)	3.79(1.05)
	관련 정책 홍보	4.50(0.65)	3.93(1.00)	3.93(1.07)
	주요 제도 개선(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	4.64(0.63)	4.43(0.85)	4.07(1.14)
거버넌스 구축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	4.07(0.73)	3.71(0.83)	3.50(1.09)
	중앙-광역-기초 간 협의체 운영	4.07(0.73)	3.79(0.70)	3.50(1.02)
	민관 협의체 운영	4.36(0.63)	3.93(1.00)	4.07(0.83)
	부서 간(지방정부 내) 협력체계 구축	4.14(0.66)	4.14(0.77)	3.93(0.47)
	당사자조직 네트워크 지원	4.14(0.77)	3.71(1.07)	3.62(0.77)
공공부문 역할 확대	공공부문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확대	4.29(0.73)	4.00(0.96)	4.00(1.11)
	전담부서 설치 등 직제조정	4.00(0.88)	3.79(0.89)	4.00(0.88)
	전문직위제 및 임기제 공무원 운영	3.57(1.02)	3.14(0.95)	3.29(0.99)
	전담인력 교육 강화	4.36(0.74)	4.21(0.80)	4.00(0.78)
	담당공무원 평가체계 개선	3.86(0.86)	3.43(0.94)	3.23(0.44)
전달체계 지원	부처별/광역별 중간지원기관 통합운영	3.46(1.05)	3.38(0.96)	3.62(1.04)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발굴, 처우개선 등	3.86(0.66)	3.71(0.91)	3.79(0.70)
인력양성	특성화대학 선정	3.43(0.94)	2.93(1.07)	2.64(1.08)
	인재양성센터 등 인재양성방안 수립	3.79(0.97)	3.57(0.94)	3.36(0.93)
	사회적가치 평가전문가 양성 및 교육	3.64(0.84)	3.71(0.61)	3.29(0.99)
	초중고 대상 직장체험 등 교육	4.00(0.68)	3.50(0.94)	3.79(0.8)
	사회적경제 기본통계 구축	4.43(0.85)	4.00(0.96)	4.07(0.92)
지식/정 보 확산	지역자원 등 실태조사	4.29(0.73)	4.14(0.86)	3.92(0.64)
	통합정보 및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운영(통계, 공공구매, 기업성과, 네트워크 등)	4.54(0.78)	4.14(0.95)	4.00(0.88)
	사업모델 개발 및 우수사례 확산	4.07(0.62)	4.00(0.68)	4.14(0.77)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	3.50(0.85)	3.43(0.85)	3.21(1.05)
	우수기업 정보 확산(사경기업 성과대회 등)	4.00(0.68)	3.64(0.84)	3.64(0.84)
	관련 기금조성 등 사회적금융 활성화	4.50(0.65)	4.21(0.80)	4.21(0.97)
주민참여 활성화	자원봉사 등 시민사회 자원 연계	3.93(0.83)	3.71(0.91)	3.86(1.03)
	주민조직 양성 및 주민참여 확대	3.86(0.77)	3.86(0.86)	4.14(0.95)
	사회혁신학교 등 주민교육	3.79(0.89)	3.86(0.95)	3.64(1.01)
	리빙랩 등 사회문제 해결 주민참여 지원	3.86(0.86)	3.86(0.86)	4.00(1.04)

※ 아래의 각 문항에 대해 전문가님의 솔직한 답변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아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별 핵심 주체입니다. 다른 전문가분들의 평균 점수, 표준편차, 응답비율과 본인의 지난 응답을 참고하시어, 주요 추진 주체를 다시 한 번 선택하여주십시오(중복선택 가능).

추진과제	전문가응답비율			본인응답			수정 여부
	중앙	광역	기초	중앙	광역	기초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50%	35%	15%	○	○		
정책 추진현황 점검/평가	48%	36%	16%	○	○	○	
관련 정책 홍보	40%	37%	23%	○	○	○	
주요 제도 개선(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	70%	20%	10%	○	○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	76%	18%	6%	○			
중앙-광역-기초 간 협의체 운영	52%	32%	16%	○			
민관 협의체 운영	15%	46%	38%		○		
부서 간(지방정부 내) 협력체계 구축	8%	56%	36%		○		
당사자조직 네트워크 지원	25%	33%	42%			○	
공공부문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확대	31%	31%	39%	○	○	○	
전담부서 설치 등 직제조정	30%	30%	40%	○	○	○	
전문직위제 및 임기제 공무원 운영	24%	41%	34%	○	○	○	
전담인력 교육 강화	25%	39%	36%			○	
담당공무원 평가체계 개선	29%	46%	25%			○	
부처별/광역별 중간지원기관 통합운영	39%	52%	9%		○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발굴, 처우개선 등	24%	52%	24%		○		
특성화대학 선정	68%	32%	0%	○			
인재양성센터 등 인재양성방안 수립	45%	45%	9%	○			
사회적가치 평가전문가 양성 및 교육	65%	35%	0%	○			
초중고 대상 직장체험 등 교육	28%	40%	32%		○		
사회적경제 기본통계 구축	62%	33%	5%	○			
지역자원 등 실태조사	15%	42%	42%			○	
통합정보 및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운영	44%	44%	12%	○			
사업모델 개발 및 우수사례 확산	33%	41%	26%	○		○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	54%	42%	4%	○			
우수기업 정보 확산(사경기업 성과대회 등)	39%	43%	18%	○			
관련 기금조성 등 사회적금융 활성화	38%	46%	15%	○	○		
자원봉사 등 시민사회 자원 연계	13%	33%	54%	○	○	○	
주민조직 양성 및 주민참여 확대	5%	21%	74%			○	
사회혁신학교 등 주민교육	10%	25%	65%			○	
리빙랩 등 사회문제 해결 주민참여 지원	11%	22%	67%			○	

2. 다른 전문가분들의 평균점수, 중간값 등을 참고하셨을 때, 아래 추진과제의 “중요성”에 대하여,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본인의 지난 응답을 변경하고자 하실 경우,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주시고, 수정하신 경우 ‘수정여부’칸에 0표 해주십시오(1개만 선택).

추진과제	기존 2차조사 응답						수정 여부
	전체 응답		2차조사 당시 응답				
	평균 값	중간 값	전혀 안함	별로 안함	보통	알려 없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4.4	5				○	
정책 추진현황 점검/평가	4.1	4					○
관련 정책 홍보	4.5	5					○
주요 제도 개선(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	4.6	5			○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	4.1	4				○	
중앙-광역-기초 간 협의체 운영	4.1	4				○	
민관 협의체 운영	4.4	4				○	
부서 간(지방정부 내) 협력체계 구축	4.1	4				○	
당사자조직 네트워크 지원	4.1	4			○		
공공부문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확대	4.3	4			○		
전담부서 설치 등 직제조정	4.0	4		○			
전문직위제 및 임기제 공무원 운영	3.6	3.5		○			
전담인력 교육 강화	4.4	4.5					○
담당공무원 평가체계 개선	3.9	4					○
부처별/광역별 중간지원기관 통합운영	3.5	3					○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발굴, 처우개선 등	3.9	4				○	
특성화대학 선정	3.4	3			○		
인재양성센터 등 인재양성방안 수립	3.8	4			○		
사회적가치 평가전문가 양성 및 교육	3.6	3			○		
초중고 대상 직장체험 등 교육	4.0	4			○		
사회적경제 기본통계 구축	4.4	5			○		
지역자원 등 실태조사	4.3	4				○	
통합정보 및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통계, 공공구매, 기업성과, 네트워크 등)	4.5	5			○		
사업모델 개발 및 우수사례 확산	4.1	4				○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	3.5	4			○		
우수기업 정보 확산(사경기업 성과대회 등)	4.0	4				○	
관련 기금조성 등 사회적금융 활성화	4.5	5					○
자원봉사 등 시민사회 자원 연계	3.9	4					○
주민조직 양성 및 주민참여 확대	3.9	4				○	
사회혁신학교 등 주민교육	3.8	4				○	
리빙랩 등 사회문제 해결 주민참여 지원	3.9	4				○	

3. 다른 전문가분들의 평균점수, 중간값 등을 참고하셨을 때, 아래 추진과제의 “시급성”에 대하여,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본인의 지난 응답을 변경하고자 하실 경우,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주시고, 수정하신 경우 ‘수정여부’칸에 0표 해주십시오(1개만 선택).

추진과제	기존 2차조사 응답							수정 여부
	전체	응답	2차조사 당시 응답					
	평균 값	중간 값	전혀 중요 하지 않다	별로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3.9	4		○				
정책 추진현황 점검/평가	3.8	3.5		○				
관련 정책 홍보	3.9	4		○				
주요 제도 개선(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	4.1	4.5		○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	3.5	3.5			○			
중앙-광역-기초 간 협의체 운영	3.5	4				○		
민관 협의체 운영	4.1	4		○				
부서 간(지방정부 내) 협력체계 구축	3.9	4				○		
당사자조직 네트워크 지원	3.6	4		○				
공공부문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확대	4.0	4		○				
전담부서 설치 등 직제조정	4.0	4		○				
전문직위제 및 임기제 공무원 운영	3.3	3		○				
전담인력 교육 강화	4.0	4					○	
담당공무원 평가체계 개선	3.2	3				○		
부처별/광역별 중간지원기관 통합운영	3.6	4					○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발굴, 처우개선 등	3.8	4			○			
특성화대학 선정	2.6	2.5		○				
인재양성센터 등 인재양성방안 수립	3.4	3		○				
사회적가치 평가전문가 양성 및 교육	3.3	3			○			
초중고 대상 직장체험 등 교육	3.8	4		○				
사회적경제 기본통계 구축	4.1	4		○				
지역자원 등 실태조사	3.9	4					○	
통합정보 및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통계, 공공구매, 기업성과, 네트워크 등)	4.0	4		○				
사업모델 개발 및 우수사례 확산	4.1	4			○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	3.2	3		○				
우수기업 정보 확산(사경기업 성과대회 등)	3.6	4			○			
관련 기금조성 등 사회적금융 활성화	4.2	5					○	
자원봉사 등 시민사회 자원 연계	3.9	4					○	
주민조직 양성 및 주민참여 확대	4.1	4				○		
사회혁신학교 등 주민교육	3.6	4			○			
리빙랩 등 사회문제 해결 주민참여 지원	4.0	4				○		

4. 다른 전문가분들의 평균점수, 중간값 등을 참고하셨을 때, 아래 추진과제를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평가지표 Pool로 구성하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본인의 지난 응답을 변경하고자 하실 경우,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주시고, 수정하신 경우 '수정여부'칸에 O표 해주십시오(17개만 선택).

추진과제	기존 2차조사 응답								수정 여부
	전체 응답		2차조사 당시 응답						
	평균값	중간값	전혀 없다	중요 하다	별로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3.9	4		○					
정책 추진현황 점검/평가	3.8	3.5					○		
관련 정책 홍보	3.9	4		○					
주요 제도 개선(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	4.1	4.5		○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	3.5	3.5					○		
중앙-광역-기초 간 협의체 운영	3.5	4					○		
민관 협의체 운영	4.1	4					○		
부서 간(지방정부 내) 협력체계 구축	3.9	4					○		
당사자조직 네트워크 지원	3.6	4		○					
공공부문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확대	4.0	4		○					
전담부서 설치 등 직제조정	4.0	4		○					
전문직위제 및 임기제 공무원 운영	3.3	3		○					
전담인력 교육 강화	4.0	4				○			
담당공무원 평가체계 개선	3.2	3				○			
부처별/광역별 중간지원기관 통합운영	3.6	4						○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발굴, 처우개선 등	3.8	4					○		
특성화대학 선정	2.6	2.5		○					
인재양성센터 등 인재양성방안 수립	3.4	3		○					
사회적가치 평가전문가 양성 및 교육	3.3	3		○					
초중고 대상 직장체험 등 교육	3.8	4					○		
사회적경제 기본통계 구축	4.1	4		○					
지역자원 등 실태조사	3.9	4				○			
통합정보 및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통계, 공공구매, 기업성과, 네트워크 등)	4.0	4		○					
사업모델 개발 및 우수사례 확산	4.1	4					○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	3.2	3		○					
우수기업 정보 확산(사경기업 성과대회 등)	3.6	4					○		
관련 기금조성 등 사회적금융 활성화	4.2	5						○	
자원봉사 등 시민사회 자원 연계	3.9	4						○	
주민조직 양성 및 주민참여 확대	4.1	4						○	
사회혁신학교 등 주민교육	3.6	4				○			
리빙랩 등 사회문제 해결 주민참여 지원	4.0	4						○	

-그동안 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록2

지자체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구축 현황

일련번호	조례명	유형	제정주체	초제정연도
1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공공구매/조달/판로	광역시	2014
2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광역시	2014
3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구매/조달/판로	광역시	2014
4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광역시	2009
5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사회적기업	광역시	2009
6	서울특별시사회투자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사회적경제기금	광역시	2012
7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자활사업	광역시	2011
8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중소기업협동조합	광역시	2020
9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협동조합	광역시	2013
10	서울특별시교육청사회적경제기업제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	공공구매/조달/판로	교육청	2014
11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협동조합	교육청	2015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6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6
14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9
15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1
16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사회적기업	기초	2012
17	서울특별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9
18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09
19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10
20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11
21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3
22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사회적경제기금	기초	2014
23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셜벤처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소셜벤처	기초	2017
24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6
25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8
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1
2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7
2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사회적기업	기초	2011
2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5
30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9



일련번호	조례명	유형	제정주체	시행연도
31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9
3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4
3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구매/조달/판로	기초	2012
34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공공구매/조달/판로	기초	2012
35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0
36	서울특별시 성북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협동조합	기초	2013
37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5
38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5
39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5
40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구매/조달/판로	기초	2013
41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1
42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사회적기업	기초	2011
43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7
44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20
45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사회적기업	기초	2011
46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1
47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04
48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중소기업협동조합	기초	2020
49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5
50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0
51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사회적기업	기초	2011
5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5
5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구매/조달/판로	기초	2015
5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1
5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사회적기업	기초	2011
5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협동조합	기초	2014
57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9
58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구매/조달/판로	기초	2014
59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09
60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사회적기업	기초	2010
6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7
62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8
63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0
64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사회적기업	기초	2010
65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4
66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0
67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구매/조달/판로	기초	2019
68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6
69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04
70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5
71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구매/조달/판로	기초	2017
72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0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주요 추진 과제 Pool 선정

일련번호	조례명	유형	제정주체	추진연도
73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사회적기업	기초	2011
7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5
75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5
76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1
77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6
78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14
7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4
8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4
8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규칙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5
8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4
8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05
84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5
85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구매/조달/판로	기초	2019
86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11
87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9
88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8
89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1
9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0
9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사회적기업	기초	2010
92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3
93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0
94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0
95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광역시	2016
96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구매/조달/판로	광역시	2019
97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광역시	2009
98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사회적기업	광역시	2010
99	부산광역시 자활기금 조례	자활기금	광역시	2019
100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자활사업	광역시	2018
101	부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중소기업협동조합	광역시	2019
102	부산광역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	협동조합	광역시	2013
103	부산광역시 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교육청	2013
104	부산광역시 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협동조합	교육청	2019
105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1
106	부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6
107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8
108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구매/조달/판로	기초	2018
109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1
110	부산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4
111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9
112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구매/조달/판로	기초	2019
113	부산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5
114	부산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12



일련번호	조례명	유형	제정주체	시행연도
115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0
116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활기금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20
11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0
11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5
119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9
120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구매/조달/판로	기초	2019
121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0
122	부산광역시동래구 자활기금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8
123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0
124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9
125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1
126	부산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8
127	부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협동조합	기초	2014
12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0
12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6
1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협동조합	기초	2013
131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9
132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1
13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4
134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1
13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19
136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18
137	부산광역시 금정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협동조합	기초	2014
138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1
139	부산광역시 강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협동조합	기초	2013
140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7
141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20
142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20
143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0
144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0
145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구매/조달/판로	기초	2019
146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0
147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5
148	부산광역시 기장군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협동조합	기초	2015
149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8
150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광역	2015
151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구매/조달/판로	광역	2019
152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광역	2009
153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사회적기업	광역	2011
154	대구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자활사업	광역	2012
155	대구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중소기업협동조합	광역	2019
156	대구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협동조합	광역	201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주요 추진 과제 Pool 선정

일련번호	조례명	유형	제정주체	추진연도
157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0
158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9
159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13
160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20
161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0
162	대구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0
163	대구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17
164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0
165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0
166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육성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9
167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1
168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6
169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0
170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1
171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18
172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9
173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0
174	대구광역시 수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협동조합	기초	2014
175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0
176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6
177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17
178	대구광역시달서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협동조합	기초	2015
179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6
18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7
181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공공구매/조달/판로	광역	2019
182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광역	2010
183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광역	2011
184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구매/조달/판로	광역	2017
185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자활사업	광역	2010
186	인천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	중소기업협동조합	광역	2019
187	인천광역시 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협동조합	교육청	2017
188	인천광역시 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사회적기업	교육청	2013
189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1
190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20
191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1
192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0
193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5
194	인천광역시부평구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1
195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0
196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문틀기 및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8
197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0
198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구매/조달/판로	기초	2019



일련번호	조례명	유형	제정주체	시행연도
199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사회적기업	기초	2011
2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0
20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0
202	강화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1
203	강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2
204	웅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4
205	광주광역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 조례	사회적가치	광역	2020
206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구매/조달/판로	광역	2017
207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광역	2013
208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광역	2009
209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사회적기업	광역	2011
210	광주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자활사업	광역	2019
211	광주광역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	협동조합	광역	2013
212	광주광역시 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교육청	2012
213	광주광역시 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협동조합	교육청	2017
214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4
215	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3
216	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15
217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사회적가치	기초	2020
218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사회적가치	기초	2020
219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5
220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구매/조달/판로	기초	2016
221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6
222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3
223	광주광역시 북구 자활사업 지원 조례	자활사업	기초	2009
224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치증대를 위한 조례	공공구매/조달/판로	기초	2016
225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5
226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활사업 지원 조례	자활사업	기초	2009
227	대전광역시 기업의회사회적책임지원센터 조례	사회적가치	광역	2017
228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광역	2019
229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광역	2009
230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사회적기업	광역	2010
231	대전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조례	자활사업	광역	2019
232	대전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중소기업협동조합	광역	2019
233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지원조례	협동조합	광역	2013
234	대전광역시 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공공구매/조달/판로	교육청	2015
235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20
236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7
237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20
238	대전광역시 중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자활사업	기초	2015
239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20
240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자활사업	기초	201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주요 추진 과제 Pool 선정

일련번호	조례명	유형	제정주체	추진연도
241	대전광역시유성구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관한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4
24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자활사업	기초	2015
243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9
244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7
245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07
246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자활사업	기초	2015
247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광역시	2018
248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구매/조달/판로	광역시	2019
249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광역시	2009
250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사회적기업	광역시	2010
251	울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자활사업	광역시	2020
252	울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중소기업협동조합	광역시	2020
253	울산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협동조합	광역시	2013
254	울산광역시 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교육청	2019
255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20
256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5
257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7
258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0
259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협동조합	기초	2013
260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8
261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5
262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06
263	세종특별자치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농업회사법인	광역시	2015
264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광역시	2012
265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광역시	2013
266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구매/조달/판로	광역시	2019
267	세종특별자치시사회투자기금설치및운영조례	사회적경제기금	광역시	2018
268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자활기금	광역시	2012
269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광역시	2012
270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교육청	2016
271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공공구매/조달/판로	교육청	2015
272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협동조합	교육청	2018
273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	사회적가치	광역시	2016
274	경기도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	공공구매/조달/판로	광역시	2017
275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광역시	2014
276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광역시	2019
277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사회적경제기금	광역시	2016
278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자활사업	광역시	2009
279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활사업	광역시	2012
280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중소기업협동조합	광역시	2020
281	경기도 교육청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공공구매/조달/판로	교육청	2013
282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4



일련번호	조례명	유형	제정주체	시행연도
283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09
284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1
285	성남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구매/조달/판로	기초	2020
286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4
287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02
288	의정부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7
289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4
290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06
291	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6
292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5
293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5
294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15
295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15
296	부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자활사업	기초	2001
297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구매/조달/판로	기초	2013
298	광명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2
299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16
300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17
301	광명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협동조합	기초	2013
302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6
303	평택시 자활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20
304	동두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5
305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5
306	고양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구매/조달/판로	기초	2017
307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4
308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7
309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07
310	고양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자활사업	기초	2014
311	과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7
312	과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협동조합	기초	2013
313	구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5
314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9
315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8
316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09
317	오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0
318	오산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구매/조달/판로	기초	2015
319	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18
320	시흥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09
321	시흥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사회적기업	기초	2010
322	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19
323	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19
324	군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6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주요 추진 과제 Pool 선정

일련번호	조례명	유형	제정주체	추진연도
325	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20
326	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20
327	의왕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9
328	의왕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협동조합	기초	2014
329	하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5
330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11
331	용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0
332	용인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사회적기업	기초	2012
333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17
334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17
335	파주시 사회적 가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가치	기초	2019
336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9
337	파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17
338	파주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협동조합	기초	2013
339	이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8
340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19
341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18
342	안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6
343	안성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자활사업	기초	2013
344	김포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6
345	김포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구매/조달/판로	기초	2014
346	김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0
347	김포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협동조합	기초	2017
348	화성시 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0
349	화성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구매/조달/판로	기초	2019
350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사회적경제기금	기초	2015
351	광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6
352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11
353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12
354	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운용 조례	자활사업	기초	2009
355	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사업	기초	2009
356	양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5
357	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0
358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7
359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13
360	연천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2
361	연천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협동조합	기초	2017
362	가평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0
363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5
364	양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12
365	양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17



일련번호	조례명	유형	제정주체	시행년도
366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광역	2014
367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광역	2014
368	강원도 자활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	자활기금	광역	2016
369	강원도 자활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광역	2016
370	강원도 자활사업지원조례	자활사업	광역	2019
371	강원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중소기업협동조합	광역	2019
372	강원도 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공공구매/조달/판로	교육청	2019
373	강원도 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사회적기업	교육청	2019
374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16
375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16
376	춘천시 풀뿌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2
377	춘천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	협동조합	기초	2019
378	원주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9
379	강릉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6
380	강릉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6
381	강릉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12
382	동해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7
383	동해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구매/조달/판로	기초	2018
384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0
385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06
386	태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1
387	태백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17
388	태백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17
389	속초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0
390	삼척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6
391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16
392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16
393	홍천군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관한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8
394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9
395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10
396	횡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9
397	횡성군 자활기금 운용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19
398	영월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20
399	영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8
400	영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14
401	평창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8
402	정선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5
403	철원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5
404	철원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17
405	철원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17
406	화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1
407	화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17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주요 추진 과제 Pool 선정

일련번호	조례명	유형	제정주체	추진연도
408	양구군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3
409	양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자활기금	기초	2013
410	양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13
411	양구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협동조합	기초	2013
412	인제군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4
413	인제군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구매/조달/판로	기초	2017
414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8
415	고성군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4
416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14
417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14
418	양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8
419	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16
420	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16
421	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광역	2020
422	충청북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구매/조달/판로	광역	2019
423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광역	2009
424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사회적기업	광역	2010
425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자활기금	광역	2011
426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중소기업협동조합	광역	2019
427	충청북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협동조합	광역	2014
428	충청북도 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공공구매/조달/판로	교육청	2019
429	충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9
430	충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1
431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7
432	충주시 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협동조합	기초	2013
433	제천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5
434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자활기금	기초	2012
435	청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4
436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14
437	보은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1
438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1
439	영동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1
440	영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16
441	진천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1
442	진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11
443	진천군 협동조합 지원 조례	협동조합	기초	2014
444	괴산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1
445	음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1
446	음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8
447	음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17
448	단양군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 조례안	농업회사법인	기초	2016
449	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1



일련번호	조례명	유형	제정주체	시행년도
450	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사회적기업	기초	2013
451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7
452	단양군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협동조합	기초	2014
453	증평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2
454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광역	2009
455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광역	2010
456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기금	광역	2019
457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구매/조달/판로	광역	2016
458	충청남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자활사업	광역	2018
459	충청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중소기업협동조합	광역	2019
460	충청남도 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공공구매/조달/판로	교육청	2014
461	충청남도 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협동조합	교육청	2019
462	천안시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09
463	천안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구매/조달/판로	기초	2016
464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1
465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07
466	공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9
467	보령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0
468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1
469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17
470	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09
471	아산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구매/조달/판로	기초	2015
472	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9
473	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12
474	서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0
475	서산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구매/조달/판로	기초	2018
476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6
477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03
478	논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09
479	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1
480	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13
481	계룡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2
482	계룡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3
483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8
484	당진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12
485	당진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19
486	금산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1
487	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6
488	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17
489	부여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0
490	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6
491	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06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주요 추진 과제 Pool 선정

일련번호	조례명	유형	제정주체	추진연도
492	부여군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자활사업	기초	2018
493	서천군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구매/조달/판로	기초	2017
494	서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1
495	청양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1
496	청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16
497	홍성군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구매/조달/판로	기초	2019
498	홍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0
499	예산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0
500	태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0
501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광역	2018
502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사회적경제기금	광역	2020
503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구매/조달/판로	광역	2019
504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사회적기업	광역	2009
505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사회적기업	광역	2011
506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광역	2003
507	전라북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자활사업	광역	2010
508	전라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중소기업협동조합	광역	2019
509	전라북도 협동조합 촉진에 관한 조례	협동조합	광역	2013
510	전라북도 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사회적기업	교육청	2015
511	전라북도 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협동조합	교육청	2017
512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4
513	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08
514	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중소기업협동조합	기초	2020
515	전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협동조합	기초	2013
516	군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8
517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09
518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사회적기업	기초	2010
519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5
520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05
521	군산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협동조합	기초	2013
522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09
523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3
524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01
525	익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협동조합	기초	2014
526	정읍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0
527	정읍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사회적기업	기초	2012
528	남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20
529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7
530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04
531	김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1
532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8
533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14



일련번호	조례명	유형	제정주체	시행년도
534	완주군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농업회사법인	기초	2012
535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09
536	완주군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구매/조달/판로	기초	2013
537	완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6
538	완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11
539	진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0
540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9
541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17
542	무주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0
543	무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자활기금	기초	2010
544	무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06
545	장수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0
546	임실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0
547	임실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15
548	임실군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협동조합	기초	2013
549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순창영류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농업회사법인	기초	2010
550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한국절임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농업회사법인	기초	2015
551	순창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0
552	순창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사회적기업	기초	2010
553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18
554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18
555	순창군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협동조합	기초	2014
556	고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20
557	고창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0
558	부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0
559	부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4
560	부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04
561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광역	2014
562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광역	2015
563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구매/조달/판로	광역	2016
564	전라남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자활사업	광역	2017
565	전라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중소기업협동조합	광역	2019
566	전라남도 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등에 관한 조례	공공구매/조달/판로	교육청	2017
567	목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9
568	목포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4
569	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5
570	여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중소기업협동조합	기초	2020
571	순천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농업회사법인	기초	2015
572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5
573	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1997
574	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1997
575	나주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주요 추진 과제 Pool 선정

일련번호	조례명	유형	제정주체	추진연도
576	나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18
577	광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8
578	담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4
579	담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16
580	담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16
581	곡성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8
582	곡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8
583	구례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8
584	구례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7
585	구례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06
586	고흥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8
587	보성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8
588	보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3
589	보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12
590	화순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7
591	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5
592	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05
593	장흥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20
594	장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04
595	장흥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6
596	강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5
597	해남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7
598	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7
599	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18
600	영암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09
601	무안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7
602	함평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8
603	영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8
604	영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20
605	장성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1
606	완도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4
607	진도군 기초생활자활기금 및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8
608	진도군 기초생활자활기금 및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10
609	진도군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 조례	농업회사법인	기초	2010
610	진도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7
611	신안군 농업회사 법인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 조례	농업회사법인	기초	2009
612	신안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20
613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광역	2017
614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광역	2018
615	경상북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자활사업	광역	2015
616	경상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중소기업협동조합	광역	2019
617	경상북도 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공공구매/조달/판로	교육청	2015



일련번호	조례명	유형	제정주체	시행연도
618	포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7
619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1
620	경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0
621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7
622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13
623	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7
624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1
625	안동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4
626	안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7
627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8
628	구미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구매/조달/판로	기초	2019
629	영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8
630	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5
631	영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7
632	영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4
633	상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0
634	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0
635	문경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09
636	문경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8
637	문경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17
638	경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7
639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3
640	군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8
641	군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1
642	의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1
643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10
644	청송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7
645	청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8
646	영양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0
647	영덕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7
648	청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8
649	청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9
650	청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17
651	고령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1
652	고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8
653	고령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협동조합	기초	2013
654	성주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7
655	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7
656	칠곡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7
657	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1
658	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03
659	예천군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0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주요 추진 과제 Pool 선정

일련번호	조례명	유형	제정주체	추진연도
660	예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1
661	봉화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9
662	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5
663	울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8
664	울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	자활기금	기초	2016
665	울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8
666	울릉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1
667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광역	2018
668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사회적경제기금	광역	2020
669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구매/조달/판로	광역	2020
670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사회적기업	광역	2011
671	경상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중소기업협동조합	광역	2019
672	경상남도 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공공구매/조달/판로	교육청	2020
673	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2
674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8
675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09
676	진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협동조합	기초	2014
677	통영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9
678	통영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6
679	사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1
680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2
681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18
682	사천시 협동조합 지원조례	협동조합	기초	2013
683	밀양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1
684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4
685	밀양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협동조합	기초	2013
686	거제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구매/조달/판로	기초	2020
687	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1
688	양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9
689	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4
690	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11
691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8
692	창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구매/조달/판로	기초	2018
693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10
694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10
695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자활사업	기초	2019
696	창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조례	중소기업협동조합	기초	2020
697	의령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1
698	의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19
699	의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19
700	함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1
701	함안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06



일련번호	조례명	유형	제정주체	시행년도
702	함안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6
703	함안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협동조합	기초	2013
704	창녕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0
705	창녕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3
706	남해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9
707	남해군 자활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자활기금	기초	1995
708	남해군 자활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1995
709	하동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8
710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16
711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16
712	산청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기초	2019
713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7
714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04
715	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1
716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시행규칙	자활기금	기초	2005
717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자활기금	기초	2005
718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0
719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사회적기업	기초	2010
720	거창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협동조합	기초	2013
721	합천군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마을기업	기초	2016
722	합천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기초	2010
723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마을기업	광역	2020
724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마을기업	광역	2020
72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공공구매/조달/판로	광역	2016
726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광역	2014
727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광역	2015
728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사회적기업	광역	2009
729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사회적기업	광역	2010
730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광역	2008
731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자활기금	광역	2006
732	제주특별자치도 자활및생활안정기금조례시행규칙	자활기금	광역	2006
733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자활사업	광역	2017
734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중소기업협동조합	광역	2019
735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협동조합	광역	2013
736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공공구매/조달/판로	교육청	2016
737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협동조합	교육청	2019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0년 자체연구 보고서

발행인 김인선

발행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소 (132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147, 새마을금고빌딩(6~8층)

전화/팩스 031-697-7700 / 031-697-7889

홈페이지 www.socialenterprise.or.kr

* 본지에 실린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